



##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北韓 核 테러리즘 可能性 分析과  
對應戰略에 관한 研究

2011年

The logo of Hansung University is a large, light blue stylized 'H' that incorporates a white square in the center. To the right of the 'H', the words 'HANSUNG' and 'UNIVERSITY' are written in a light blue, sans-serif font, stacked vertically.

漢城大學校 國際大學院

國際安保戰略學科

國際安保專攻

金 鍾 洙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金應洙

北韓 核 테러리즘 可能性 分析과  
對應戰略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Possibilities Counter Strategies of the  
North Korea's Nuclear Terrorism Threat

2010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國際大學院

國際安保戰略學科

國際安保專攻

金 鍾 洙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金應洙

北韓 核 테러리즘 可能性 分析과  
對應戰略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Possibilities Counter Strategies of the  
North Korea's Nuclear Terrorism Threat

위 論文을 國際安保戰略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0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國際大學院

國際安保戰略學科

國際安保專攻

金 鍾 洙

金鍾洙의 國際安保戰略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10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인)

審査委員 \_\_\_\_\_ (인)

審査委員 \_\_\_\_\_ (인)

## 목 차

|                                 |    |
|---------------------------------|----|
| 제 1 장 서 론.....                  | 1  |
| 제 1 절 연 구 목 적.....              | 1  |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 제 2 장 테러리즘에 관한 일반론적 고찰.....     | 4  |
| 제 1 절 테러리즘의 개념.....             | 4  |
| 1. 테러리즘의 정의 .....               | 4  |
| 2. 테러리즘의 발생원인 .....             | 7  |
| 3. 현대 테러리즘의 특성 .....            | 11 |
| 제 2 절 핵무기 확산 및 핵 테러리즘 관련정책..... | 15 |
| 1. 핵무기 개발 및 위협 .....            | 15 |
| 2. 국제사회의 핵 테러리즘 방지 정책 .....     | 18 |
| 제 3 장 북한 핵 정책과 테러리즘 위협 분석.....  | 24 |
| 제 1 절 북한의 핵 위협 분석.....          | 24 |
| 1. 북한의 핵개발 능력 및 위협수준 .....      | 24 |
| 2. 북한의 핵 정책 방향 .....            | 27 |
| 제 2 절 남한내 핵 테러리즘 발생 가능성 분석..... | 30 |
| 1. 북한의 대남 테러리즘 조직과 활동능력 .....   | 31 |
| 2. 도난 핵물질 활용한 테러 위협 .....       | 39 |
| 3. 원자로 및 핵시설 파괴 위협 .....        | 41 |

|                                      |    |
|--------------------------------------|----|
| 제 4 장 북한 핵 테러리즘 예방을 위한 대응전략 ...      | 45 |
| 제 1 절 국제레짐을 통한 공조 노력.....            | 45 |
| 1. 유엔 제재결의안 이행 촉구.....               | 45 |
| 2. 단계적인 국제공조 추진.....                 | 46 |
| 제 2 절 주변국과 협조체제 강화.....              | 50 |
| 1. 오바마 행정부의 핵군축정책과 한미동맹체제 공고화·       | 50 |
| 2.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유지 .....          | 52 |
| 3. 기타 국가들과 대북 핵정책 공조 .....           | 55 |
| 제 3 절 WMD군축과 Grand Bargain 추진.....   | 58 |
| 1. WMD의 확산억제 .....                   | 58 |
| 2.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적극 시행 ..... | 61 |
| 제 5 장 결 론 .....                      | 65 |
| 【참고문헌】 .....                         | 68 |
| ABSTRACT .....                       | 77 |

## 【표 목 차】

|         |                             |    |
|---------|-----------------------------|----|
| [표 2-1] | 폭력적 행동의 제 유형 .....          | 9  |
| [표 2-2] | 핵 폭발시 피해범위(20kt) .....      | 17 |
| [표 3-3] |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운용 의도의 유형 ..... | 29 |
| [표 3-4] | 북한의 테러리즘 수행기구 .....         | 32 |
| [표 3-5] | 북한의 미사일 보유 현황 .....         | 38 |
| [표 4-6] | 북핵 국제공조 실행 .....            | 48 |

## 【그 립 목 차】

|          |                  |    |
|----------|------------------|----|
| <그림 2-1> | 전쟁양상의 분류 .....   | 13 |
| <그림 2-2> | 핵무기 보유국 현황 ..... | 20 |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 구 목 적

지구상의 모든 국가와 민족들은 생존을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으며,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의 출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냉전시대에는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대립에 의한 위협이 국가안보에 가장 큰 관심사였다. 그러나 냉전종식 이후 이데올로기에 의한 갈등과 국제전쟁에 의한 폭력현상은 차츰 줄어들었지만 다른 형태의 갈등으로 냉전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던 시대보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분쟁의 숫자는 더 늘었다고 한다.<sup>1)</sup>

그 중 동북아시아에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쟁지역은 한반도일 것이며,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하여 핵에 의한 분쟁 가능성은 더욱 고조됐다고 예측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3대 세습체제 구축을 위해 내부결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남한의 공산화를 위해 각종 위협을 가해하고 있다. 특히 2010년도에는 대포적으로 천안함 침몰사건, 연평도 포격도발사건 등 군사적 도발과 함께 군은 물론이고 민간인에게도 무차별 피해를 주었으며, 공개적으로 우라늄을 개발하고 핵 위협을 가중시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현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상생과 공영의 대북 정책방침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정책 수단으로 ‘비핵·개방·3000 구상’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북한을 국제사회에 편입시키고 비핵화와 개방화를 유도하고 촉진하며 상생의 경제협력을 확대해 10년 내에 북한경제 수준을 1인당 3,000달러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반응은 어려운 식량난과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

1) 김웅수, “테러리즘의 초국가적 확산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경남 대학원 박사논문, 2008), p.1.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는 핵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한반도의 공산화를 위해 변함이 없는 노선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다양하고 많은 분쟁속에서 살아왔으며, 이러한 분쟁 또는 테러리즘이라는 현상은 인류 역사가 국제관계를 유지한 시점부터 함께 존속하여 왔으며 근·현대시대에 새로운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

최근에 이르러 고도로 발달된 과학기술로 오늘날 국제사회를 ‘테러리즘의 잠재적 희생자’로 몰아가고 있으며, 범세계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지역분쟁, 분란, 내란, 민족해방운동, 테러리즘 등의 제 폭력현상은 인류가 폭력과 테러리즘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sup>2)</sup>

특히, 현대 테러리즘은 국제분쟁 중 한 형태로 부류되고 있으며, 테러리즘의 목표 대상이 한 개인이나 사회가 아니라 국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종교적 갈등과 분쟁의 성향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데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 테러리즘이 개인이나 사회의 범주를 넘어 국가간의 분쟁과 대리전쟁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테러의 수단과 방법이 다양하고 대부분의 테러행위가 정치적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국제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다.

현대 테러리즘과 국제 관계속에서 북한의 핵보유는 기정사실화가 되었으며, 핵 테러리즘 가능성은 증대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시점에 본 논문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집중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첫째, 테러리즘의 정의와 현대 테러리즘(뉴 테러리즘)을 명확히 이해하고 국제 테러리즘의 유형을 구분하며, 9·11 테러 이후 대두된 핵 테러리즘에 대한 위협과 북한의 핵테러 가능성을 분석하고,

둘째, 북한의 핵 정책 능력을 평가하고, 북한의 테러를 중심으로 한 조직 편성과 핵 테러에 대한 위협 가능성과 국내 원자로 시설의 안전진단과 테러위협 가능성과 대응능력을 분석하며,

셋째, 북한의 핵문제와 핵 테러리즘 예방에 대한 국제공조 노력과 한반

---

2) 이태윤, 『현대 테러리즘과 국제정치』, (서울 : 한국학술정보, 2010), p.22.

도를 중심을 한 국가들과의 관계와 우리의 입장을 연구하는데 논문의 중점과 방향을 설정하였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현대 테러리스트들의 자살 폭탄 등 대담한 행동으로 국제 사회 및 인류의 생존에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분쟁양상이란 관점으로 일반적인 테러리즘을 이해하고 핵관련 테러리즘과 북한의 핵 능력을 파악하며, 국내적으론 원자력에 대한 안전 진단 및 위협을 분석하고 대응방안과 국제적인 공조노력을 본 논문의 연구범위로 설정하였으며, 5개장으로 연구의 범위를 구성하였다.

제 1장은 서론으로 본 논문의 핵 테러리즘과 북한의 핵 위협과 핵 테러리즘을 둘러싼 국제안보연구에 대한 연구목적과 이를 연구하기 위한 범위 및 방법을 기술하였고,

제 2장은 테러리즘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테러와 테러리즘의 정의를 구분하고 반(Anti)·대(Counter)테러리즘을 통해 예방책과 대응책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현대 테러리즘의 특성을 일반론적으로 고찰하였으며,

제 3장은 북한의 대남 테러리즘의 조직과 유형 및 최근 핵 개발경과와 수준을 분석하고, 북한의 핵 테러 가능성에서 핵물질을 도난하거나 원자로 시설을 파괴 할 수 있는 위협의 가능성을 분석하였으며,

제 4장은 북한의 핵 및 테러리즘 억제를 위한 국제공조 및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국과의 대응책을 분석하고 한국의 현주소와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제 5장은 본 연구를 통해 북한의 핵 테러리즘 위협과 대응전략을 강조 및 재정리하였다.

연구방법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회도서관, 통일연구원, 국방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이나 문헌을 조사하고 테러리즘 관련 단행본이나 학위 논문집을 활용하였으며, 국방일보나 주요 일간지를 참고하였다.

## 제 2 장 테러리즘에 관한 일반론적 고찰

### 제 1 절 테러리즘의 개념

#### 1. 테러리즘의 정의

테러리즘은 공포와 폭력을 내포하는 다양한 형태의 모든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강제와 억압의 수단으로 테러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포괄적 의미를 지닌다.

또한 테러리즘에 대해 일반적인 개념을 정의하기에는 많은 의견과 당시 상황을 고려해야 하므로 조직적인 정치 폭력의 일환으로 테러리즘의 행위와 탈선적 행위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테러와 테러리즘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명확한 테러리즘의 개념을 이해한다면 종합적인 대테러정책을 발전시키는 근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sup>3)</sup>

일반적으로 테러와 테러리즘은 동의어로 사용하거나 상호 교호(交互)적으로 사용해 특별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나 공통적으로, 테러는 특정한 위협이나 공포로 인해 모든 인간들이 심적으로 느끼게 되는 극단적인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 발생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극도로 불안한 심리상태 즉 '자연적인 심리현상'이라고 하면 테러리즘은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회집단에게 작용한 폭력의 사용을 통한 하나의 전략을 의미하며, 다소 객관적이고 가치평가를 부정적으로 결정하는 범죄성의 결과를 강조하는 폭력의 조직적·의도적·체계적인 활동을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4)</sup>

테러리즘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테러리즘에 대해 다양한 정의를 내놓고 있으나, 그들의 정의에 핵심적인 요소로는 폭력의 직접적인 사용이나

3) 김웅수, 전제논문, p.11.

4) 이장희,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과 과제” 『테러리즘에 대한 법적조명과 그 대응방안』 (서울,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2001), pp.50-51.

위협을 테러행위의 본질적 요소로 인식한다는 점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권력을 장악하고 기존권력을 파괴 또는 붕괴시키는 등 정치적인 테러가 주요하며, 직접적인 테러 목표보다는 다양하고 일반적인 객체에게도 공포와 같은 심리적 상징적 효과를 노린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테러리스트들은 철학적 근거와 이데올로기적인 사고, 조직적인 연계성 등 테러 조직의 주체성과 계획적인 활동을 들 수 있다.

오네일(O'Neil)은 “테러는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에 의해서 행해지는 분쟁의 한 형태이며 장기적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독단적으로 비도덕적인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가르노(Ganor)는 ‘테러리즘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인 또는 민간표적에 의도적으로 폭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면서 테러리즘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적 목적이 없는 폭력적 활동은 범죄행위일 뿐이며, 테러리즘은 민간인을 목표로 하면서 게릴라전, 민중폭동 등의 정치적 폭력과 구분되고 민간인의 취약점을 이용하며 민간 표적을 공격함으로써 엄청난 긴장과 대중매체의 반응을 야기하며 민간인에 가해진 정치폭력이 실수에 의한 가해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행하여진 행위임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테러가 행위나 수단적 측면을 강조하는 극도로 불안한 심리적 상태의 자연적 현상임에 반해, 테러리즘은 다소 객관적이며 가치평가를 부정적으로 내린 범죄성의 결과를 강조하는 폭력의 조직적·의도적·체계적 활동을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테러리즘은 조직적인 정치·사회적 활동의 일환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테러를 심리전의 한 형태로 사용하고자 하는 테러집단이나 테러정권의 조직적 대중폭력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테러리즘을 인식하는데는 각자의 입장과 시각의 차이로 정의를 결정하는데 많은 제한이 따른다. 일제시대 안중근 의사사건이나 의병활동이 일본에서는 테러리즘으로 평가되나 우리로서는 애국자이듯이, 테러행위의 주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며, 민족해방전쟁과 테러리즘의 관계 등 많은 문제와 이해관계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테러행위를 어디까지 인정하

느냐는 문제와 테러행위의 동기와 정치범과의 관계설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sup>5)</sup>

현대 국제 테러리즘을 사건 발생 단계별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구분하면 예방적 의미의 반테러리즘(Anti Terrorism)과 위기관리의 대응적 의미인 대테러리즘(Counter Terrorism)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반테러리즘(Anti Terrorism)은 테러 조직을 색출하고 거점을 분쇄하며 대처능력을 강화시켜 테러리스트의 활동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사전에 예방 및 방지하는 개념으로 테러리즘 근절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테러리즘 발생 환경요소를 제거하는 것으로 테러리즘 발생의 근원이 되는 정치적 불안정·억압·경제적 빈부 격차에서 비롯된 상대적 박탈감·불안·심리·실업·빈곤 등 정치·사회·경제·심리적인 면에서 테러리즘의 온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말하며,

테러리스트 조직을 색출하여 사전 체포하거나, 자금원을 차단하여 테러리스트의 도피처 및 안식처를 제거하여 조직 및 그들의 활동을 와해시켜 원천적으로 테러 활동을 근절하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강화하여 테러리즘을 자진 포기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과 제한적이기는 하나 사전 테러리스트를 검거하는 방법을 통해 사전 테러리즘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그에 따른 인적·물적 자원 소요가 많이 든다는 것에 제한이 따른다.

이에 반면, 대테러리즘(Counter Terrorism)은 반테러리즘(Anti Terrorism)의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인질 및 항공기 납치, 건물 점거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노력으로 진압책의 개념이다.

따라서 반 테러리즘이 최선의 방책이라면 테러리즘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면 피해의 폭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테러리즘에 직면한 정부는 테러리즘 발생과 진행과정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인질에 대한 상태와 구출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며, 테러리즘의 사건 종결을 위한 작전을 계획하고 테러리즘으로 인한 정치적 손실을 극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에 따른 사후관리를 해야만 하나 사후관리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제한되는 요소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sup>6)</sup>

5) 김응수. 전개논문, pp.13-14.

6) 최진태, 『테러리즘의 이론과 실제』 (서울, 대영문화사, 2006), p.234.

## 2. 테러리즘의 발생 원인

테러리즘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그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겠다. 발생 원인이 규명되지 않으면 테러리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없으며, 나온다 하더라도 특정사건에 대한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테러리즘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은 다양한 각도에서 시도되고 있다.

테러 발생의 기본적인 조건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를 가져야 하고,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을 통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위협은 실질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충격과 공포를 유발함으로써 그 효과가 더욱 극대화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sup>7)</sup>

따라서 테러리즘 발생원인은 분류방법이나 학문적 배경에 따른 접근방식이 다를 뿐 결과는 대동소이하다. 이런 접근방식의 차이는 국제 정치 및 사회적으로 테러사건을 위주로 분석하는 방법과 인간관계의 본질의 테러 심리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만 그 원인을 분류 하겠다.

### (1) 정치적 관점의 원인

정치적으로 소외받거나 억압받고 있을때 열세에 몰린 정치집단이 가장 쉽게 접근하여 자신의 정당성이나 사상을 표현하는 수단이 테러리즘이다.

테러의 규모가 커지면서 혁명운동세력은 그들이 정치적 불만을 성공적으로 국제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테러는 오늘날 국제 정치를 규정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라는 주장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sup>8)</sup>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테러리즘이 확산되는 원인은 그들이 기존 정권을 타도하고 자신들이 중심이 된 새로운 정치질서를 창출해 내는 데 있어 테러리즘은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국제간의 빈부 격차, 종교 문제 등으로 영토 분쟁, 자원 확보와 국가 간

7) 세종연구소, 「테러와 한국의 국가안보」, (서울, 세종연구소, 2004), p.46.

8) 김응수, 전개논문, p.35.



이권문제 및 민족 자결권과 감정대립, 외교적 주도권을 가지기 위한 패권 다툼 등은 많은 정치적 현안문제에 대해 좀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테러를 사용하거나, 특정 테러집단에게 금전, 무기, 기지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강대국의 식민정치에 대한 민족적 저항이나 민족해방운동, 정치적 억압, 민중의 지배계층에 대한 투쟁, 경제적 착취계층과 당하는 계층에서 발생하는 테러리즘도 들 수 있다.

주요 국제 테러단체로는 알카에다<sup>9)</sup>, PLO, IRA, 스페인 바스크조국해방, 세네갈 카사망스 민주세력운동,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등의 민족주의적인 단체로 들 수 있다.

9. 11 테러 이후 미국은 아프간전과 이라크전을 수행하면서 협력에 응하는 정도에 따라 파·아를 구분하였으며, 국제동맹관계도 대테러시대에 맞게 정립하였으며, 집단방위체제에서 위기관리체제로 동맹의 역할과 기능을 전환하려는 이른바 “의지의 동맹(Coalition of the Willing)”<sup>10)</sup>개념으로 구성하여 핵 통제레짐을 위반한 인도, 파키스탄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였고, 북한과도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세계 국가들은 미국과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테러리즘을 비난하며 유엔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처한다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 (2) 개인 심리적 차원의 원인

심리학자들은 폭력의 원인을 논함에 있어 인간의 내적 요소가 폭력 행위를 유발하게 하고 지시,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동기의 본질은 두 가지로 구별될 수 있는데 그 하나가 폭력에 대한 자극요소이며 다른 하나는 목적달성을 위한 합리성의 정도이다. 이 두 요소는 폭력과 관련하여 개인의 성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sup>11)</sup>

9) 알(AL)카에다(Qaeda): 이슬람 대표 테러리즘 단체, 미국이 지어준 이름으로 오사마 빈라덴 조직, 9. 11테러범으로 미국은 규정; 최진태, 「알카에다와 국제테러조직」 (서울, 대영문화사, 2006), p.13.

10) 의지의 동맹(Coalition of the Willing): 2002년 11월 NATO정상회담을 위해 유럽을 방문한 부시 대통령이 사단 후세인에게 공언하면서 최초로 사용, 2003년 이라크 공격에 가담한 국가, 국제제건을 지원한 국가 등을 통틀어 지칭한 용어; 김웅수, 전계논문, p.48.



이들 자극요소는 외적 요소와 내적 요소로 구분되며 외적 요소는 행위를 유발시킬 수 있는 상황적인 것으로 핵문제, 빈민문제, 식량문제, 실업, 전쟁 등과 같은 환경적 동기를 수반하는 것이며, 이들은 이미 존재해 온 내적 동기에 반응하게 된다.

한편, 내적 자극요소는 개인 또는 집단의 심리상태에 기인하며 이성적, 감정적 요소로 구분되어 요구되는 목표에 부합되는 합리성에 기초를 두어 결정된다.

또한 [표 2-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력행위의 성격이 공격 성향일 경우 사회적 반응으로 나타나며 사적 성향일 경우 폭력은 개인범죄로 나타난다.<sup>12)</sup>

[표 2-1] 폭력적 행동의 제 유형

| 자극요소<br>성향 | 이성,<br>내성적 | 감정,<br>외부적 | 감정, 내부적 | 이성,<br>외부적 |
|------------|------------|------------|---------|------------|
| 개 인        | 범죄         | 복수         | 병리현상    | 자경주의       |
| 대 중        | 테러리즘       | 항거         | 반사회적 이상 | 준군사        |

\* 출처: Augustus R. Norton and Martin H. Greenberg(eds.) *Studies in Nuclear Terrorism*(Boston, Massachuselts G. K. Hall and Co. 1979). p.207.

거(Ted Robert Gurr)의 “상대적 박탈감이론”(Relative Deprivation Theory)은 ‘기대와 실제 간의 고리’(gulf between expectation and actual condition) 내지 ‘기대가치와 가치능력 간의 갭’(gap between the value expectation and the value capabilities)에서 정치적 폭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탄생한 신생국들이 정치적 독립과 더불어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즉 정치현실의 당위와 현실 사이의 불일치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상대적 박탈감이란 인간으로서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의 제 조건

11) R. W. Mengel, "Terrorism and New Technologies of Destruction: An Overview of Potential Risk", Stud in Nuclear Terrorism, R. Norton and Martin H. Greenberg(eds.)(Boston, Massachusetts G. K. Hall and CO, 1979), pp.206-207.

12) Ibid, p.207.

과 실제로 향유하는 조건의 격차에서 오는 괴리를 뜻한다.<sup>13)</sup>

그는 구체적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관련하여 폭력을 야기하는 사회과정의 전형적인 유형을 열망적 가치박탈(Aspirational deprivation), 점감적 가치박탈(Decremental deprivation), 점진적 가치박탈(Progressive deprivation)로 구분하였다.

먼저, 열망적 가치박탈이란 개인의 희망과 기대감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대되지만 그 열망을 채워 줄 충족감의 변화가 없을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흔히 개발도상국에서 빈번하여 혁명의 증대현상 속에서 급속한 발전에 욕망이 체제를 크게 앞서는 데서 비롯되는 극심한 박탈감을 가진 폭력을 창출하여 이로 인하여 열망적 박탈감이 팽배한 국가는 만성적 불안에 싸이게 된다.

따라서 극단적인 경우에 정치적 불안정은 폭동, 태업, 암살, 테러리즘, 게릴라전, 구테타 등의 유발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둘째 유형인 점감적 박탈감이란 개인의 기대감이 시간적으로 일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에 비해 그 열망을 채워 주는 가치충족 능력이 오히려 점점 하락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는 한 국가가 사회정치적 혼란으로 들어갈 때 가치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그 집단의 가치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없을 때에 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1917년 러시아의 볼셰비키(Bolsheviks)혁명은 이러한 유형으로서 권력을 획득할 수 있었다.<sup>14)</sup>

당시 러시아 국민은 제 1차 세계대전에 대하여 불만이 높았으며 케렌스키(Kerensky) 정부가 전쟁을 종결할 수 없었을 때에 레닌(Lenin)의 즉각 평화(immediate peace)가 주요하였던 것이다.

셋째 유형인 점진적 가치박탈은 일정 기간 동안 국민의 열망을 채워 줄 가치 충족감이 가치능력과 비례적 상승을 보여줌으로써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일정시점에서 그 충족도가 하락함으로써 발생한다.

---

13) Ted Robert Gurr, Why Men Rebel(Princeton, New York, New Jersey: Princeton Uni. Press, 1970), p.37.

14) Ibid, p.47.

이러한 현상은 식민지사회에서 해방과 독립이 지연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정치폭력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회변혁에서 기인하는 개인 및 사회의 박탈이라는 과정에서 가치 간의 균형을 상실할 때 결과적으로 좌절감이 조성되고 이것은 곧 폭력적인 해결방식으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제 2차 세계대전 후 많은 국가들이 사회변동을 경험하고 근대화의 과정에서 일정한 사회 집단의 불만과 소외현상을 폭력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했음을 볼 수 있다.

### 3. 현대 테러리즘의 특성

#### (1) 새로운 형태의 전쟁

현대 테러리즘의 목적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이념 등의 갈등 등 본질적인 목적을 지니면서, 위협이나 폭력같은 테러행위를 통해 공포나 위협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부의 무능력을 결정적으로 드러내 보인다.

국가나 국제적으로 대중, 메스컴, 정부당국의 주의를 끌어들여 극적인 상황을 연출시켜 자신들의 대의(大義)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얻어 그들의 목적을 공개하고, 대정부 또는 테러 대상의 과잉반응을 유발시켜 사회갈등을 조장하며, 금전이나 장비를 획득하고, 운송·통신시설을 파괴하며, 행정과 입법 활동을 방해 및 지연과 외국의 투자나 원조 계획을 방해하고, 선거 등 중요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테러리스트 동료들의 석방 및 복수 등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계 각처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에서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한 것은 칼에서부터 초정밀 전자무기 및 전자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무기체계를 들 수 있으며, 테러리즘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낸 것은 테러가 예상치 못한 장소와 특정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희생을 주었으며, 실시간 언론매체가 반영됨으로 세계 인류가 테러리스트로부터 자신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중압감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작은 힘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힘이

없는 자들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과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 (2) 저강도 분쟁 확산

클라우제비츠(Clausewitzian)가 제시한 전쟁론은 전쟁을 일으키는 유일한 조직은 정부이며, 정부가 사용하는 전쟁 수단은 정규군으로 정규군대가 아닌 다른 집단은 폭동, 살인행위로 취급하였으며, 전쟁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요인은 국민이라는 3가지 요소를 구성하였다.

20세기까지 서구 전쟁사에서 그의 학문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으나, 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의 전쟁 모습이 급격하게 변질된 이 시기에 있어서 이 전쟁이론은 그대로 추종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것은 핵무기의 등장이다. 핵무기의 파괴력은 전쟁이 정치의 연속이라는 이성적 전쟁론을 더 이상 타당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다.

핵전쟁이란 국가의 자살을 의미하므로 그 어떤 이유도 국가의 과멸이 확실한 핵전쟁을 개전할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과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실제 전쟁사에서 추론된 경험에 의한 주장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수 천명의 희생과 국제분쟁 중에서 고전적 의미의 재래식 전쟁(Conventional War)<sup>15)</sup>은 한국전쟁, 중동전쟁, 포클랜드 전쟁, 이란·이라크 전쟁, 그리고 최근의 걸프전쟁 등으로 불과 몇 회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쟁의 모습은 변화되고 있다. 미래전은 강대국의 전면적인 정규군이 동원된 재래식 정규전과 최첨단 무기가 동원된 전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종교적 분쟁 등 폭동·테업·혁명의 활동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영역의 또 다른 형태의 전투와 폭력 행위를 망라한 테러리즘과 소규모의 국제 분쟁으로 치열하고 발발 가능성이 높은 유형인 저강도 분쟁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선전포고 없는 전쟁(a new undercleared from of warfare)을 의미하며, 1980년대 이후 특수한 방식의 전쟁형태로 전쟁의 스펙트럼 속에서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sup>16)</sup>

15) 재래식 전쟁: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정규전쟁으로, 클라우제비츠의 전쟁 논리에 부합되지 않은 전쟁을 말함.

16) 김응수, 전제논문, p.40.

정치·경제·사회·심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래식 전쟁이 아닌 국가 간의 정치적, 군사적 분쟁을 저강도 분쟁(Low Intensity Conflict)이라 할 수 있는데, 저강도 분쟁은 지속적인 테러리즘을 통해 외교적, 사회 심리적 압력에서부터 분쟁까지를 포함한다.

저강도 분쟁의 군사적 양상은 폭력, 무기, 전술의 수준에서 제한되는 특성을 가지며, 여기에는 군사적 시위, 평화유지, 구출작전, 대테러작전, 특수작전 및 정규전의 제한적이고 직접적인 군사력의 사용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sup>17)</sup>

크리벨드 교수는 1945년 이후의 현대전쟁의 양상을 분류했을 때 그 모습을 저강도 분쟁(Low Intensity Conflict)이 높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저강도 분쟁은 주로 후진국지역에서 발발하고 있으며, 근대 군사력의 첨단 무기 체계에 의존하지 않았고, 정규군이 동원되지 않은 그러면서도 어떤 정규군도 격파할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미래 전쟁의 모습으로 보고 있어 현대 국제사회의 폭력을 독점해 왔던 국가의 지위가 점차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전략을 재판단하는 보고서인 2010 QDR(국방보고서)<sup>18)</sup>에서도 대테러를 우선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저강도 분쟁인 테러리즘이 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늘날 국제 테러리즘은 국제분쟁의 전쟁양상과 관련하여 전쟁의 다양한 양상별 가능성을 테러리즘에서부터 저강도 분쟁, 재래식 전쟁, 저·중강도 전쟁, 핵전, 전략전으로 확대될 개연성을 나타내고 있다.

각 양상의 전쟁발생시 해당 국가가 감수해야 할 위험도는 발생 가능성과는 정반대의 확률로 나타나고 있다.<sup>1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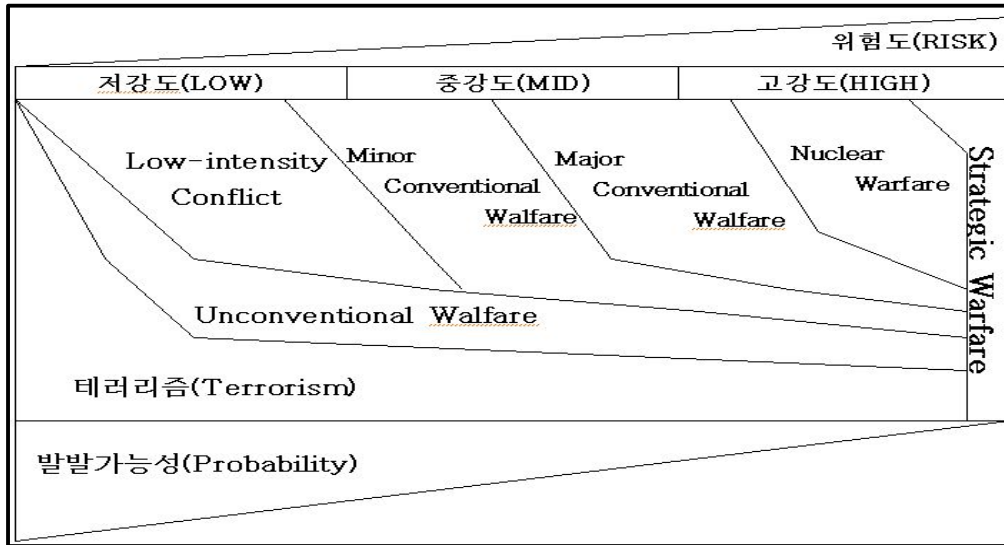
그러므로 전쟁의 양상별 발생 확률과 전쟁 발생시 해당 국가가 받아야 할 위험도에는 완전한 반비례 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 김웅수, 전제논문, pp.71-72.

18) QDR(Quadrenial Defence Review Report), 1997년 미 국방수권법에 의거 첫 보고서가 발간됨, 4년주기로 발간되며, 2010년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전략수립의 준거는 하이브리드전쟁(Hybrid War Face)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 이태운, 「21세기 국제 테러리즘」 (서울, 모시는 사람들, 2004), p.39.

[그림 2-1] 전쟁 양상의 분류



\* 출처: U. S. Nation War College, **Terrorism**(Washington. D. C: U. S. National War College, 1986), p.6.

향후 안보위협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투력의 투사능력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기체계의 자동화, 전자전의 확산, 최첨단 센서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군사혁신(RMA)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핵무기와 대량살상 무기, 고밀도 탄약, 전자무기, 재래식 대량 살상무기, 전자전과 사이버전, 초미세한 기술, 테크노 테러리즘 등의 부분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sup>20)</sup>

### (3) 대량살상 무기의 확산

오늘날 테러리즘이 여러 위협수단 중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이유는 대량살상무기(WMD : Weapons of Massive Destruction)의 확산이다.

대량살상무기는 화학무기나 생물 및 방사능 무기, 핵무기 등 짧은 시간에 많은 인명과 재산을 파괴하는 강한 파괴력을 가진 무기들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생물무기금지협약(BWC),

20) 김웅수, 전제논문, p.83.

화학무기금지조약(CWC)등 여러 국제협약에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9·11 테러사건 이후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이라크·북한·이란 등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핵무기 테러나 미사일을 대량살상무기 투발수단으로 이용한 테러 사례는 없으나, 화학제나 생물제를 이용한 테러 사건들은 무수히 많다.

1995년 3월 일본에서는 옴진리교 추종자들이 지하철에서 사린(Sarin)가스를 살포해 12명이 죽고 5,500명이 부상을 당하는 테러 사건이 있었으며, 사전에 그들은 핵무기 및 화생무기 연구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 밖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으며, 주로 테러리스트는 일부의 전문지식을 가진 인원으로 화생무기를 생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제조가 용이하게 개발이 가능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테러에 이용되고 있다.

또한 자살 테러도 시도하고 있고 그 목표 대상이 일반인을 겨냥하고 그 피해도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예방대책을 강구하기에는 많은 제한이 따른다.

## 제 2 절 핵무기 확산 및 핵 테러리즘 등장

### 1. 핵무기 개발 및 위협

#### (1) 핵무기 개발 경과

핵무기는 미국이 최초로 개발하였고, 뒤이어 구소련과 영국 등이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참가하여 5개국이 NPT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실험을 실시하여 보유 사실을 간접 시사하였으며, 북한도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이스라엘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NCND 정책<sup>21)</sup>을 취하고 있다.

또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자발적으로 보유 핵무기를 폐기한 후 그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개발 사실이 알려졌다.

1950~1960년대 초의 발전방향은 핵무기의 위력을 증가시키는 데 힘쓰는 한편 핵탄을 소형화하여 작은 부피와 무게로도 큰 위력을 내게 하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수소폭탄의 등장과 더불어 핵분열·핵융합의 결합으로 단위 질량당 폭발력이 대폭 증대되었으며, 핵탄의 소형화는 다탄두 미사일의 등장 등 핵무기체계의 다양화를 가능케 하였다.

1970년대에는 투발 수단의 정확도 향상으로 대규모 폭발력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핵탄두의 위력이 작아지기 시작하였고, 핵탄의 안전성과 신뢰성 향상에 주력하였다.

1980년대 이후로는 핵분열·핵융합의 비율을 조정하여 핵무기 효과 중 일부를 억제 또는 증대시킴으로써 필요한 효과(낙진 효과, 방사능 효과)만이 주로 나타나도록 하는 특수목적의 핵탄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것으로 중성자탄이 있으나 실전에는 배치되지 않았다.

향후에는 핵분열·핵융합의 비율 조정으로 필요한 효과만 주로 발생시키는 특수 목적탄의 개발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초플루토늄탄, 가변성 위력의 핵탄 및 핵탄의 소형화 방안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미국은 테러세력과 북한 등 핵비확산 우려세력의 지하시설을 효과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벙커버스터(Bunker-buster)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

21) NCND정책(Neither Confirm Nor Deny policy): 미국의 핵전력, 핵 병기의 해외주둔 혹은 해외반입, 미국의 핵우산국 내 핵무기 존재 여부 등과 관련하여 문제제기가 있을 때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정책, 제 2차 세계대전 중 핵무기 사용에 대한 비판을 피하고, 핵개발 확산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채택, 1954년 만들어진 국내법인 원자력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 (2) 핵무기 효과

핵무기는 폭발시 핵물질이 가진 전체 에너지의 99%를 수백만분의 1초 동안에 방출하고, TNT 같은 재래식 폭발물은 1,000분의 1초 동안 반응하여 에너지를 방출한다.

핵무기 1mt의 위력은 TNT 100만t에 해당된다. 이 정도 위력을 갖는 핵탄두 크기는 직경 50cm, 높이 1m 이하이다. 반면 TNT로 그만한 위력을 내려면 화물차(20t 적재, 길이 10m)가 5만대 필요하고, 그 길이는 500km 이상에 달한다.

핵무기가 폭발하면 폭풍파(55%), 열복사선(30%), 초기방사선(15%)이 대량 방출되고 잔류방사선(낙진)에 의한 방사능 오염과 전자기 파동(EMP) 효과를 수반한다. 1MT의 핵폭발이 있을 경우 반경 12km 이내에서 2도 화상을 입거나 종이와 마른 잎이 즉시 발화되며, 반경 10km 이내에서는 3도 화상이 일어난다. 또 반경 7km 이내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발화하고 물질이 녹아내린다. 반경 1km 이내의 모든 것은 순식간에 증발된다. 이밖에 3,000m 상공에서의 공중폭발을 50km 밖에서 육안으로 볼 경우 망막에 영구 손상을 입는다.

핵무기 피해는 이러한 효과가 복합되어 일어난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폭탄은 평탄한 시가지 중심의 약 580m 상공에서 폭발하였으며, 폭풍에 의한 건물 파괴와 열선에 의한 화재로 약 13km<sup>2</sup>의 시가지가 파괴되었다.

1945년 12월까지 약 135,000명이 사망했는데 그중 약 20%가 폭풍에 의한 외상사, 약 60%가 화상사, 나머지 20%는 방사선에 의한 사망이었다. 그러나 효과는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으며,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치사량의 방사선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나가사키 탄의 경우 도시 중심부를 벗어난 산 부분의 상공 약 500m에서 폭발한 까닭에 히로시마 원폭보다 위력이 컸음에도 약 195,000명의 인구 중 64,000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는 적었다.

핵무기 효과는 핵탄의 폭발 높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하폭발은 낙진이나 초기방사선 및 열이 거의 없다. 지표면 폭발시에는 낙진 효과가 가장 크고, 공중폭발 시에는 낙진의 범위가 비교적 작은 폭풍, 열 및 초기방사

선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20kt은 공중 3,000m, 10kt은 공중 2,400m에서 폭발시키는 것이 최대효과 [표 2-2] 를 내고 있다.

[표 2-2] 핵폭발시 피해범위(20kt)

| 구 분    | 열 효 과<br>(화재) | 열 효 과<br>(화상) | 초기방사선<br>(감마선)  | 낙 진             | 폭풍효과<br>(건물피해)   |
|--------|---------------|---------------|-----------------|-----------------|------------------|
| 1. 2km | 화 재           | 치 사           | 치 사<br>(5일~1개월) | 심각한<br>오염(15km) | 완 파              |
| 2km    | 산발적 화재        | 3도 화 상        | 50% 치사          |                 | 상당한<br>오염(~40km) |
| 3km    | 화재 가능         | 2도 화 상        |                 | 경 미             |                  |
| 4km    |               | 1도 화 상        |                 |                 |                  |
| 5km    |               | 망막 화 상        |                 |                 |                  |

\* 출처: 국방부,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이해”(2010), p.69.

### (3)핵무기 종류

핵무기란 원자핵의 분열반응 또는 융합반응으로 발생하는 방대한 에너지를 인명 살상 및 시설 파괴에 사용하는 무기의 총칭으로, 원자폭탄(A-bombs), 수소폭탄(H-Bombs), 핵무기(nuclear weapons), 핵분열폭탄(fission bombs), 핵융합폭탄(fusion bombs), 열핵무기(thermonuclear weapons) 등으로 불린다. 핵무기는 파괴력을 발휘하는 에너지가 발생하는 핵반응의 종류에 따라 크게 핵분열 무기(예, 원자폭탄)와 핵융합 무기(예, 수소폭탄)로 분류할 수 있다.

## 2. 국제사회의 핵 테러리즘 방지 정책<sup>22)</sup>

핵무기는 그 위력이 상상을 초월하므로 테러조직들은 핵물질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오늘날 세계적인 추세는 핵 테러리즘이 중요한 전략의 도구가 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핵은 위협의 수단으로써 매력적이므로 향후에는 예기치 못한 형태(시간, 장소, 방법 등)의 핵 테러리즘이 출현할 개연성도 내포하고 있다.

22) 김석철, “핵테러리즘에 대한 원자력 시설 대응능력 평가 방법론”, 『대테러정책 연구논총 제5호』, (국가정보원, 2008). pp.229-245

따라서 핵테러 분야는 실험을 위한 허용범위도 없고 효과적인 안전보호 정책도 없는 실정이어서 핵 테러리즘 가능성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기 보다는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느냐가 중요 하겠다.<sup>23)</sup>

핵 테러리즘(뉴 테러리즘, 슈퍼 테러리즘, 메가 테러리즘으로도 표현)의 정의는 “테러의 행위로서 고의적으로 인명을 살상 또는 상해를 목적으로 핵무기나 방사능 무기를 불법적으로 사용, 사용위협 또는 핵물질 또는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을 공격하여 핵무기의 제조에 필요한 핵 물질을 탈취하거나, 고의적으로 방사능 누출사고를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될 수 있다.

IAEA는 핵물질 또는 방사능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핵시설을 공격하여 방사능 누출을 일으키는 테러행위를 방사능 사보타지(Radiological Sabotage)라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사보타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테러집단 또는 테러분자가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핵시설을 공격하여 방사능 누출을 일으키려면 대상 시설의 계통이나 운전에 대한 고도의 정보와 지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내부 동조자 또는 정보제공자가 있어야 한다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하였다.

IAEA의 핵물질 또는 핵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지침(INFCIRC 224/rev.4)은 방사능 사보타지를 “방사선의 조사(Exposure)또는 방사능물질의 누출을 고의적으로 일으켜 대중과 환경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핵시설 또는 사용·저장·운반중인 핵물질에 대한 위해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UN은 2005년 4월 59차 UN총회에서 핵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적 대응체계를 위해 가칭 “핵 테러리즘 척결을 위한 국제협약”을 추진한 바 있다.

이 국제 협약의 골자는 핵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법체계확립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핵물질의 불법 취득, 전환, 전용, 및 전이의 방지와 방사능 사보타지를 방지에 노력한다는 것이다.

핵 테러리즘의 방지 및 대응체제로 핵무기사용 및 핵무기 사용위협 대

23) 김응수, “테러와의 전쟁: 군사적 대응과 특수부대 운용”,(서경대 군사학 연구 제4호, 2010), p.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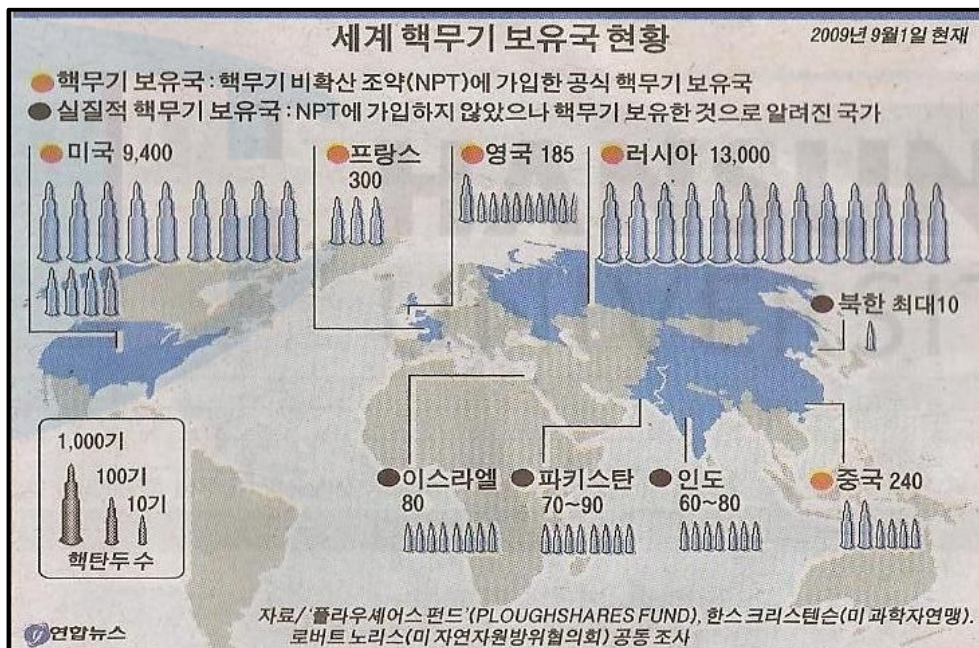
응 체계로는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대확산 레짐을 들 수 있으며, 방사능 테러에 대해서는 핵물질의 불법 탈취,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 방호의 강화와 방사능 사보타지의 예방 / 완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 1) 비확산(Non Proliferation)

비확산은 다자간 협상이나 지역 간 안보협력을 포함한 다자, 양자 또는 지역 간 조약이나 협약 등을 통해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배치 및 확산을 방지하는 안보레짐<sup>24)</sup>이다.

핵 비확산체계의 핵심은 핵 핵확산 금지조약(NPT: Non Proliferation Treaty), IAEA 안전보장조치활동, 핵 공급국 규정과 현재 진행 중인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및 핵무기용 핵물질 생산 금지조약(FMCT: 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등을 들 수 있다.

[그림 2-2] 핵무기 보유국 현황



\* 출처: 국방일보, "미 국방장관, 북·이란에 모든 옵션 가능 사설"(2010. 4. 8), 8면.

24) 안보레짐(regime)이란 국제관계의 특정분야에서 동조행위자들이 추구하는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원칙, 규범, 규칙, 정책결정과정들의 묶음이다. 원칙은 행위의 목적에 대한 신념체계이며, 규범은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행동기준이다. 규칙은 행동을 위한 규정이며, 정책결정과정은 집합적 선택조건들을 구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천과정을 의미한다.

NPT는 시작부터 핵무기 보유국 [그림 2-2] 과 핵무기 비보유국간의 불평등성이 문제가 되어 평가회의의 쟁점이 되어 왔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NPT는 국제사회에서의 핵무기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IAEA의 안전보장조치활동은 NPT가 가입 당사국으로 하여금 조약 가입 시 18개월 이내에 「IAEA와 안전조치 협정」 체결을 의무화하고 IAEA에 검증을 위임함에 따라 IAEA는 당사국과 「전면안전조치협정」 체결을 통해 핵물질의 군사적 전용여부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는 것이다.

IAEA의 안전보장조치활동은 IAEA 7개 부서 중 하나로 500여 명의 사찰관련 인원으로 구성된 안전보장 조치부(Department of nuclear safeguards)에서 수행하고 있다.

IAEA의 안전보장조치 활동은 핵물질의 계량관리(Accountancy control), 핵물질 전용(Diversion)을 방지하기 위한 격납(Containment)/감시(Surveillance) 및 현장사찰을 통한 봉인 및 물질수지계량 검증 등으로 대표된다.

지하, 수중, 대기권, 우주 등 모든 지역에서 전면적 핵실험 금지를 포함하고 있는 핵실험 금지조약(CTBT: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은 1996년 9월, 한, 미, 러 등 126개국이 제안하여 제 52차 UN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현재 비엔나에 80여명으로 구성된 준비기구인 CTBTO(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Organization)가 발족 운영되고 있다.

핵물질 생산금지조약인 FMCT(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 - 무기용 핵분열물질의 생산금비에 관한 조약,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은 1995년 NPT 연장 및 평가회의에서 “핵 비확산 및 핵군축에 관한 원칙과 목표”에 핵무기용 핵물질생산금지조약(FMCT)을 명시하는 조약으로 2000년 NPT 평가회의시 5년 내에 동 조약 협상을 타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러시아와 중국은 핵물질 생산금지조약(FMCT)을 외교권의 군비경쟁 즉, 미사일 방어(MD)문제와 연계시키고 있으며, 인도, 파키스탄을 포함한 비동맹 그룹은 핵물질 생산금지조약(FMCT)을 군축 및 소극적 안전보장과 연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등 각국 간의 견해차이가 커서 핵물질 생산금지조약(FMCT) 협상은 현재 교착상태에 있다.



미국은 이러한 국제적인 다자협상체제 이외에도, 미국주도의 국제 프로그램들을 예를 들면, GTRI(Global Threat Reduction Initiatives)를 통한 고농축 우라늄의 전환프로그램, 신규원전이나 새로운 개념이 원자로 설계에서 “핵확산 저항성(Proliferation Resistance)”을 요건으로 하는 GIF/PRPP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Proliferation Resistance and Physical Protection) 또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핵주기 시설에서의 핵확산 저항성의 확보를 통해 핵물질의 전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GNEP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등을 통하여 핵비확산에 의한 미국의 대한 핵위협 감소 및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 2) 대확산(Counter Proliferation)

미국은 이란, 이라크, 북한의 경험을 통해 WMD의 위협요소의 제거 및 최소화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화학무기금지조약기구 등 다자간 협의를 통한 수동적인 WMD 비확산 노력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을 갖고, 위협요소 제거를 위한 군사행동(선제공격포함)을 포함하는 대확산 개념으로서의 방향전환을 모색하고 있고, 국제적인 상황인식의 공유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견지하고 있다.

대확산 개념은 수동적인 비확산 개념보다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통한 비대칭전(Asymmetric War) 위협이 미국 및 동맹국들에 대한 중대한 안보위협이 되고 대량살상무기가 불량국가<sup>25)</sup>나 테러단체와 같은 비국가단체들에 의해 확산되었다는 전제하에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수단을 통해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을 제거하고, 사용의지를 포기시킴으로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확증하는데 필요한 통합된 제반조치들 및 전략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대확산 체계는 탐지, 감시 및 획득포기를 포함한 확산방지(Prevention) 거부, 제지를 포함한 억제(Deterance), 정밀타격, 적극방어 및 소극방어 5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군사적 대응방안 강조되고 있다. 확산방지는 기존의 비확산체계의 연장선상에서 활용 가능한 정치, 군사, 외교적인 수단

25) 불량국가(Rogue State), 냉전이후 새로운 적을 규정한다는 명목으로 미국이 만들어 낸 용어,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위협하고 세계평화와 고존을 위협하는 제3세계를 지칭하는 말, 노암 호스키, 2001

을 동원하여 WMD의 취득 및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다.

억제의 개념은 불량국가 또는 비국가단체가 WMD의 취득 또는 확산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이의 사용을 억제하거나,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대처방안의 확보와 보복 응징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다.

정밀타격(Counterforce)은 자위적 선제공격의 개념으로, 불량국가나 비국가단체가 WMD를 사용하려는 징후를 포착하거나, 사용이 확실시 된다고 파악될 때, 선제공격을 통해 WMD의 공격의도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다. 정밀타격대상 목표로는 WMD생산시설, 저장시설, 또는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발사대와 투발수단 등이 포함된다.

적극적 방어(Active Defense)는 미사일 방어체계(MD: Missile Defense)나 항공기를 기반으로 하여 적의 대량살상무기가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공중에서 요격 제반 방어조치를 포함한다.

소극적 방어(Passive Defense)는 대량살상무기가 사용되었을 때 이로 인한 정보, 오염탐지, 오염지역 및 오염규모의 확인, 제독 및 제염활동, 의무 후송 등 개인 및 집단의 방호활동을 포함한다.

### 3) 사후관리(CM: Consequence Management)

사후관리란 불량국가 또는 비국가 단체에 의한 테러, WMD의 사용 또는 기타 화. 생. 방 핵관련 긴급우발 사태 발생 시 인명, 재산 및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응체계의 확립 및 위기관리를 위한 정부간, 또는 정부부서간의 상호 협조 지원 등을 포함한 제반조치를 의미한다.

사후관리 활동으로는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의 구축, 비상대응관련 절차서 개발, 교육훈련, 군수 및 비상 진료체계 등이 포함된다.

## 제 3 장 북한 핵정책과 테러리즘 위협분석

### 제 1 절 북한의 핵 위협분석

#### 1. 북한의 핵개발 능력 및 위협 수준

##### (1) 핵물질 보유량 및 무기화 능력

북한의 채광실적과 핵연료 가공실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가늠할 수는 없지만 북한에는 약 2,000만 톤의 우라늄이 매장되어 있고 가채량은 약 400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평산과 순천 2곳에 우라늄 광산과 평산과 박천 2곳의 우라늄 정련공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IAEA에 보고한 적이 있는데, 평산에서 채광된 원광은 인접지역인 평화리 정련공장에서 정련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북한이 1994년 미국과의 제네바합의 체결 이후 동결되었던 영변은 5MW 원자로와 건설 중단된 2기의 원자로를 위한 핵연료도 충분히 자체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혹을 불러일으킨 영변의 5MW 원자로는 천연우라늄을 핵연료로 하고 흑연 감속제를 사용하는 가스 냉각로이며, 북한 자체의 기술로 1980년 7월에 착공되어 1987년 초부터 가동되었다.<sup>26)</sup>

이러한 흑연 감속형 가스냉각 방식의 원자로는 효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국가가 없는 제1세대의 구형원자로이지만 플루토늄 생산이 용이하여 순수 군사적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원자로이다.

만약 이 원자로가 순조롭게 작동되었다면, 북한은 이미 1994년 미국과의 제네바합의 체결 전에 재처리를 통해 무기급 플루토늄을 8~13Kg 정도 추출했을 것이며, 그 양은 핵무기 1~3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북한은 적어도 미국의 제1세대 핵무기와 비슷한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 선행기술, 인력 및 조직 등을 갖추고 있다.

26) 이상학, “북한 핵과 한국의 안보”(군사논단. 제 36호, 2003), p.1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수치는 무기 설계기술과 소유하고 있는 무기급 플루토늄 양과 관련되어 있다. 이외에도 북한은 1994년 4월~5월에 걸쳐 영변의 5MW 원자로 폐연료봉을 인출하였다. 이 폐연료봉이 모두 재처리되었다면,<sup>27)</sup> 북한은 4~5개의 핵무기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북한군의 전술교리, 투발체계와 핵분열 물질의 이용능력을 고려하면, 북한군은 2000년까지 소규모 비축과 운용전력으로 사용하기 위해 30~60KT 범위의 핵무기를 10~20개 제조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데이비드 올브라이트는 1999년 말에 북한이 약 30~40Kg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우라늄 농축을 이용한 핵개발 계획은 우라늄 농축시설의 장소와 기술수준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하며,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탐지하기도 어려워 이를 이용한 핵무기 개발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추정하기는 어렵다.<sup>28)</sup>

그러나 북한은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무기는 언제든지 조립할 수 있는 핵보유의 단계에 있다고 평가되며, 5MW 원자로에서 추출된 8천개의 폐연료봉이 모두 재처리되었다고 가정하면 북한의 플루토늄 총 보유량은 핵무기 5~8개를 제조할 수 있는 양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엔 농축우라늄을 이용하여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도달했음을 시사했다.

## (2) 핵무기 운반체계 위협

북한은 기본적으로 원식적인 핵폭발장치, 항공기를 이용하여 투하하기 위한 폭탄, 탄도미사일 장착용 핵탄두 등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중 노동 1호 또는 대포동 1호나 2호 미사일에 장착 가능한 핵탄두는 1톤 이하 크기로 소형화하여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이러한 크기로 소형화하는데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27) 2003년 10월 21일에 정부 고위당국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폐연료봉 8천개 중 현재 약 2,500개를 재처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LAEA는 대략 2천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03. 10. 21. 10면.

28) 핵무기 1기를 만들 수 있는 15Kg 정도의 농축우라늄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100여기의 원심분리기를 5년간 지속적으로 가동해야 가능하다고 한다. 『동아일보』, 2003. 3. 6. 11면.

탄도미사일 체계가 북한의 핵무기 운반체계의 핵심인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과 개발기술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1960년대부터 중동으로의 무기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에 관심을 갖고 핵·화학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중국과 구소련의 지원으로 도입한 무기를 분해하여 설계의 핵심을 탐지하는 역설계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한 결과, 북한의 미사일 개발기술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한다.

북한의 이러한 기술수준은 북한이 1987년 개량형 Scud-B 미사일을 제조하여 이란, 시리아 등지에 수출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북한은 이미 1976년도에 사거리 220~300Km, 탄두중량 1,000Kg에 달하는 Scud-B 미사일을 이집트로부터 도입하여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개량하여 수출했던 것이다.<sup>29)</sup>

또한 1989년에 독자적으로 사정거리 550Km인 Scud-C 미사일을 개발하였고, 1993년에는 사정거리를 1,000~1,300Km로 늘린 노동 1호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하였다. 1997년 9월에는 노동 1호 미사일을 실천 배치하였고, 1998년 8월에 사거리 1,500~2,000Km의 대포동 1호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였다.

이 시험에서 운반물체를 궤도까지 쏘아 올리는데 실패하였지만, 사거리를 대폭 확장하기 위해 운반체계의 첫 단계는 노동 미사일을, 두 번째 단계는 Scud-B 미사일을 사용하였다고 한다.<sup>30)</sup>

한편, 북한은 사거리 4,300~6,000Km의 대포동 2호 미사일을 개발하였고, 2006년 7월 5일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였다. 비록 단시간 비행 후 해안가로 떨어져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 시험발사를 계기로 더욱 미사일의 성능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되고 있다.

핵무기 운반체계 중에서 항공기를 살펴보면 북한은 공군전력의 양적인 증강과 더불어 질적인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고, 특히 구 소련제 신예 항공기인 MIG-23 / 29를 10년 이상 운용하고 있다.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 중 MIG-23 / 29, IL-28 폭격기 등

29) 국방부, 『국방백서』, (서울, 2004), p.47.

30) 정영태, 전계서, p.72.

의 경우 핵무기 운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sup>31)</sup>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은 핵무기 운반수단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노동 미사일과 대포동 미사일 등에 장착이 가능한 1톤 이하의 소형화된 핵탄두를 개발한다면 운반수단에는 제한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 2. 북한의 핵 정책 방향

핵 정책 유형을 대별하면 크게 네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첫째, 핵무기를 공개적으로 보유하는 정책으로 핵 무장국 순서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의 순서로 정리되고, 인도는 여섯 번째, 파키스탄은 일곱 번째이며, 북한이 핵 보유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면 여덟째(The 8th) 핵보유국이 된다는 것으로 “N-th정책”이라 한다.<sup>32)</sup>

둘째, 일본의 경우처럼 비핵 3원칙을 표면에 내세움으로서 비핵국 지위를 고수하지만, 핵의 평화적 이용 명분과 실리적 입장에서 언젠가 필요할 때 핵무장 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핵력을 계속 축적할 수 있는 소위 “N-t정책”이 있다.<sup>33)</sup>

셋째, 핵 보유에 대한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상대국으로 하여금 전략적으로 강요하는 매우 독특한 정책이 “불확실정책(NCND)”<sup>34)</sup>이다. 핵무장 능력을 어느 정도 공개하여 한·미·일에게 핵 보유의 가능성을 질게 풍기는 북한의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흔히 「북한판 NCND」라고 한다.

31) 김성일 공군참모총장은 17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IL-28 폭격기로는 2~3t 무게의 핵폭탄을 운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2006. 10. 18. 10면.

32) N-th라는 표현은 몇 번째로 핵을 보유했는가 하는 순서를 표기할 때 나타나는 서수식 표현이다. N은 자연수로 1, 2, 3이고 th는 영어의 서수 어미를 표현한 것임.

33) N-t 정책은 핵 보유정책을 말하는 “N-th”에서, 마지막 h자, 즉 핵무기 조립과정만 빼내어 국가적인 잠재력에 묻어 둔다는 의미이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의 핵정책을 핵무장 잠재력 보유정책 이라고 한다.

34) 핵 보유를 확인도 부인도 않는 상태로 핵사용의 불투명성을 증가시켜 국익을 지켜가는 이스라엘의 핵정책과 같은 것이다. 즉, 일종의 불확실 전략으로 「북한판 NCND」란 북한의 입장에서 핵 보유 사실 여부가 그들의 핵카드 활용에 도움이 되도록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전략이다.

넷째, 민족전체의 생존과 번영을 위하여 한반도에 핵전장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대명제 하에 어떠한 경우에도 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절대 비핵평화주의를 신봉하는 한국의 핵정책이 있다. 북한의 핵정책은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로 스스로 밝힌 적은 없으나 그동안 국제회담 및 대외 성명 발표 등을 통해서 핵을 보유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 (1) 북한의 핵정책 변화

북한은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핵실험을 통한 핵 보유국가로서의 지위를 누리려고 있지 않다. 인도나 파키스탄은 NPT나 IAEA 가입을 거부하면서 결국 핵 보유국가 지위에 진입하였다. 이와는 달리 북한은 IAEA와 NPT에 정식으로 가입하고 핵사찰을 받기도 하였으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증폭되고 있다.

북한의 원자력 산업은 핵무기 개발을 우선시 하면서 추진되어 왔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고 있는 1차적 이유는 남한을 무력 적화하기 위한 공격력 확보에 있다. 그러나 그들의 무력적화 목표 달성에 걸림돌로 간주해온 것은 한·미동맹 차원의 주한 미군의 존재다.

북한이 소량의 핵무기를 가졌다 해서 강대국인 미국에 대해서 선제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선제 핵 공격을 완전히 부정하기도 어렵다.

특히 북한과 같이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로 독특한 일인지배정권을 유지해 오고 있는 국가가 강대국에 대해서 핵 공격하는 무모함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의 김정일 및 당·정·군 고위간부들은 핵카드를 미군철수 요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핵 공갈’로 미국의 군사적 개입 자체를 차단하고 독자적으로 대남한 군사적 승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전쟁 발발 시 북한은 미 본토뿐만 아니라 주일 및 주한미군에 대한 핵무기 사용 ‘공갈’로 미군의 한반도 군사전략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핵전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북한의 핵정책이 “NCND정책”이던 “N-th

정책“이던 정책일 뿐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핵무기 보유자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NPT 탈퇴 결정 하나만으로 외교적 승리를 거두었다고 자축하는 북한이 핵의 효용성을 한국에다 적용하는 것은 북한판 NCND정책의 확대재 생산을 노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핵을 갖게 되면 한국을 위협의 인질로 삼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협상에서 북한 측의 억지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리한 상황 조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 핵 사용의 가능한 대상범위는 사정거리 1,500km 이내의 주변국으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 따라서 NCND정책이 아니라 핵무기 보유 자체에 의미를 두고 주변국이 핵보유국으로써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N-th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

## (2) 북한의 핵무기 운용 의도

북한의 핵무기는 개발 및 보유 위협단계에 있으므로 핵무기 운용 의도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북한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논란은 곧 북한의 핵정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3-3]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운용 의도의 유형

| 구 분 |     | 목 적       |              |
|-----|-----|-----------|--------------|
|     |     | 적 극 적     | 소 극 적        |
| 계 기 | 대외적 | ① 대외공세 모색 | ② 대외열세 극복    |
|     | 대내적 | ③ 체제강화 모색 | ④ 체제붕괴 위기 극복 |

\* 출처: 김태준, 『테러리즘-이론과 실제』 (서울, 불명, 2006), p.437.

여기에서는 [표 3-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가지의 차원, 즉 그것이 대외적 관계 속의 계기에서 비롯되고 있는가 아니면 대내적 관계 속의 계기에서 비롯되고 있는가, 그것이 보다 유리한 정세를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목적에서 비롯되고 있는가 아니면 불리한 정세를 극복하기 위한 소

극적인 목적에서 비롯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분리하여 해석할 수 있다.<sup>35)</sup>

첫째, 북한은 핵무기가 대외관계, 특히 대남 및 대미관계에 있어서 공세적인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즉, 북한이 대남 혁명 및 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하고 있지 않으며 대미 적대노선을 지속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핵무기가 갖는 군사공격용으로서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이전보다 유리한 대남 및 대미정세를 조성하려 한다는 것이다.<sup>36)</sup>

둘째, 북한은 공세적 국가목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냉전 상황 하에서 대외관계, 특히 대남관계에 있어서 열세를 보이는 측면이 있으며, 이러한 대외 열세를 핵무기개발 및 운용을 통하여 극복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입장도 있다.

셋째, 북한의 주체사상은 민족적 자긍심과 위신을 강조하는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이며 국방 분야에서 국방자위 정책으로 표출되어 왔다. 만일 북한이 강력한 무기로서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게 된다면 주체사상의 관점에서 민족적 자긍심과 위신을 높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주체사상에 입각한 국방자위노선의 자연스러운 이데올로기적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북한이 대내적으로 체제붕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서는 경제난에 따른 사회질서 혼란이나 대규모 주민폭동 발생, 사상적 해이에 따른 정부통제력 상실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는 바로 이러한 체제붕괴 요인을 차단하여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

## 제 2 절 남한내 핵 테러리즘 발생 가능성 분석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분단국가이며, 가장 호전적인

35) 윤종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현황 및 의도와 전망”, (국방부 군비통제자료 34호, 2003), pp.26-41.

36) 홍관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한국의 대응』, (서울: 통일연구원, 2002), pp.26-51.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초보적인 수준의 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대응도 결코 낙관적으로 보기에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전 세계의 여러 테러리스트 단체를 지원해 왔고, 그들이 직접 나서 테러리즘을 자행해 온 것이 드러나 불량국가(Rogue State)이면서 테러지원국<sup>37)</sup>로 지명되어 왔으며, 새로운 테러리즘의 유형으로 간주되는 생·화학무기를 다량 보유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지속적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은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도 과거보다 긴장이 고조된 상태이며, 아직까지 북한이 테러리즘 노선을 영구히 포기한다는 선언을 한 적도 없으며, 북한에 의한 테러리즘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1. 북한의 대남 테러리즘 조직과 활동능력

### (1) 북한의 테러리즘 수행조직

북한의 테러리즘 수행조직은 테러리즘을 위한 책임조직과 행동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수부대와 같은 성격의 북한의 테러리즘 책임조직은 상황에 따라 테러리즘 행동조직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 두 조직은 실제적으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sup>38)</sup>

북한의 테러리즘 조직의 기초는 25개의 특수전 여단과 12만명의 특수전 부대 병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테러리즘 부대들은 노동당에 이원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북한의 테러리즘 수행을 위한 조직이 대남공작의 환경에 따라 약간씩 변화되어 왔으나 책임 주체로는 노동당이 담당하고 행동조직은 인민 무력부가 관장하지만 기타 여러 조직들이 서로 유기적인 연계를 갖고 테러리

37) 테러지원국(State Sponsors of Terrorism), 화학, 생물학,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고도의 컴퓨터 해킹 기술을 갖고 있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 매년 4월 미 국무부는 국제 테러보고서에 USA PATRIOT법에 따라 각종 제재(무기수출금지,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 수출통제, 대외원조금지, 무역제재 등)를 가함, 현재 7개국(북한,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수단, 시리아) 지정

38) 구광모, 『북한의 테러 전략』, (국제 정치논집 24집 2호, 서울: 한국국제정치학회, 1984), p.199.



대남 테러리즘과 해외 테러리즘을 담당하는 기구는 [표 3-4]에 나타난 것과 같이 노동당이 계획-지휘를 담당하고 인민무력부가 실행한다.

```

graph TD
    Mayor[노동당] --- Agency[대남 공작 통제 및 조정]
    Committee[중앙인민위원회] --- Agency
    Agency --- Office[대남사업담당비서]
    Agency --- Bureau[인민 무력부]
    
    Office --- General[통 일 전선부]
    Office --- Liaison[연락부]
    Office --- Investigation[조사부<br/>(작전부)]
    Office --- External[대 외 정 보 조사부]
    
    Bureau --- 907[907 군부대]
    Bureau --- Security[경보교도<br/>지도국]
    Bureau --- Criminal[정찰국]
    
    General --- Direct[직접 침투과]
    Direct --- North[남 북 회담과]
    North --- ExternalAffairs[해 외 담당과]
    ExternalAffairs --- NorthResearch[남조선 연구소]
    
    Liaison --- Liaison[남한 지역<br/>담당과 (4)]
    Liaison --- LiaisonSouth[남한사회<br/>지도총<br/>담당과 (4)]
    LiaisonSouth --- ExternalAffairs2[해 외<br/>담당과 (5)]
    ExternalAffairs2 --- SouthResearch[대성<br/>총국]
    
    Investigation --- Opening[개 성<br/>연락소]
    Opening --- OpeningSouth[청 진<br/>연락소]
    OpeningSouth --- NorthPost[남 포<br/>연락소]
    
    Investigation --- Disappearance[사라원<br/>연락소]
    Disappearance --- DisappearanceSouth[원 산<br/>연락소]
    DisappearanceSouth --- DisappearanceSouth2[해 주<br/>연락소]
    
    External --- ExternalAffairs3[단기<br/>공작과]
    ExternalAffairs3 --- ExternalAffairs4[해 외<br/>담당과 (5)]
    
    907 --- 448[448<br/>군부대]
    448 --- NorthPost2[남 포<br/>해 상<br/>복수부대]
    
    Security --- SecuritySouth[경 보<br/>여단(7)]
    SecuritySouth --- SecuritySouth2[지 격<br/>여 단 (4)]
    SecuritySouth2 --- SecuritySouth3[항공육<br/>전여단 (5)]
    
    Criminal --- CriminalSouth[저 격<br/>여단(5)]
    CriminalSouth --- CriminalSouth2[군단<br/>경포병<br/>여단(4)]
    CriminalSouth2 --- CriminalSouth3[사단경<br/>포병대<br/>대(25)]
  
```

\* 출처: 김태준, 『테러리즘—이론과 실제』 (서울 봉명, 2006), p.277.

구체적으로, 전술 테러리즘 책임조직으로서는 노동당의 통일전선부이며, 여기에서는 직접침투, 해외공작, 대일공작, 대남심리전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락부는 공작원을 양성, 훈련, 침투임무를 수행하며, 조사부는 공작원



들의 기본교육 및 안내, 호송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정치보위부와 사회 안전부에서는 북한 내의 테러리즘을 지휘하며, 인민 무력부는 대남 테러리즘 및 해외 테러리즘을 자행하거나 지원한다.

지난 1987년에 발생한 KAL기 폭발사건, 1998년에 발생한 동해 잠수정 사건, 그리고 1974년 장충동 국립극장 8·15행사장에서 문세광에 의한 박 대통령 시해 미수 및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과 1997년에 발생한 김정일의 처조카인 이한영 암살사건과 1983년의 미얀마 아웅산 폭발테러사건 등은 모두 노동당의 통일전선부, 대외연락부, 35호실, 작전부의 테러리즘 부대들이 저지른 것이다.

이들 테러리즘 부대들은 각종 침투수단과 테러용 장비와 무기, 화생 및 독소무기까지도 보유하고 있어서 필요시는 어떤 형태의 테러리즘도 한반도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자행할 수 있는 태세가 되어있다.

## (2) 북한의 대남 테러리즘 활동

북한의 테러리즘은 동해와 남해안 등에 잠수함(정) 침투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면 대화, 일면 도발이란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 김정일은 김대중 대통령과 역사적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에도 당 간부들에게 평화 제안을 절대 믿지 말라고 역설했으며, 2001년 12월 북한의 공작선으로 추정되는 괴선박이 일본의 해상보안청 소속 함정에 발각되어 추적당하는 과정에서 격침된 적도 있었다.

이처럼 북한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이중적인 언행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이중성은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래 그들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적화통일에 대한 목표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은 곧 북한의 대남 테러리즘과 테러에 대한 위협이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북한이 테러리즘을 획책하려는 목표는 남·북한 대결에서 보다 유리한 상황과 환경을 조성하고 남한사회에 공포심을 조장하여 사회를 혼란시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테러리즘에 대한 정부의 대 테러리즘으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국민생활의 불안과 탄압 등을 유도하여 정부에 대한 무능력과 불신감을 고조시키고, 나아가 남한에서의 혁명여건을 성숙시켜서 궁극적으로

정부에 대한 무능력과 불신감을 고조시키고, 나아가 남한에서의 혁명여건을 성숙시켜서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대한민국을 불법적으로 기습남침공격을 할 당시 한반도 공산화라는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였으며, 아직까지 그들의 공산화통일 목표를 변경했다는 증거를 찾아 볼 수가 없다. 북한은 통일전선 전략·전술과 심리전, 평화적인 협상제스처 등 다양한 수법을 병행하면서 “민족공조, 반전평화, 반미자주화, 주한미군, 보안법 철폐” 등 다양한 구호를 외쳐왔다. 한편으로는 북한은 테러리즘을 통해 한국사회를 무질서와 혼돈상태로 몰고 가려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왔다.

북한이 테러리즘을 통해 불안과 공포를 조성시키고 한국사회를 전복시키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테러리즘은 그들이 일관되게 추구하고 있는 대남적화통일이라는 그들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테러리즘을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6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 29개국에서 반정부 학생시위 선동, 폭동, 분규, 배후조종, 국가원수 암살교사 등 반정부 세력에 의한 정부 전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등의 테러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처럼 이들이 전개하는 테러리즘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39)</sup>

첫째,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테러리즘이다. 북한은 변함없는 적화통일이라는 목표를 갖고 국가 최고 지휘자의 지휘 아래 전문적으로 훈련된 특수공작요원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책적 차원에서 자금, 훈련, 전략, 전술 및 작전에 이르는 조직적 행동을 지원한다.

둘째, 직접적인 테러리즘의 대상은 주로 남한에 한정되고 있다.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가 한국 내의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등의 혼란 조성에 의한 국력 소멸과 미국 내의 여론을 악화시켜 미국에 대한 한국의 지원 저지 및 주한 미군 철수를 목표로 한다.

셋째, 국제 혁명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 폭력 수출이다. 북한은 60년대 중반부터 무력 적화통일들을 지원하였다. 1966년부터 북한은 중남미·아프리카 등 35개국에 테러리스트 훈련단 및 고문단을 파견하여 게릴라 및 테

39) 김태준, 『북한의 테러와 테러리즘』 (국방연구 제45권 제1호, 2002), p.274.

러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1994년 9월까지 해외에 파견한 북한의 훈련단으로부터 교육받은 테러리스트의 수는 5,000~8,000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1년 9·11 세계무역센터 폭파사건 이후 미국은 테러리즘 지원국에 대한 공개적인 경고를 했으며 특히 2002년에는 부시 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하여 ‘악의 축(Axis of evil)’이란 용어를 사용할 정도로 북한이 테러리즘 지원국이며 테러리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조를 했다.

넷째, 북한은 내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부에 대한 적대감이나 긴장을 조성시킨다. 북한은 주민의 정치·경제·사회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적대적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대중의 동원과 지속적인 공격적 행위를 통해 전쟁 발생에 대한 긴장과 위기감을 조성시켜 왔다.

다섯째, 북한은 대남 테러리즘에 대한 유감 표명이 대단히 미온적인 태도로 마지못해 일부 사안에 대해서 이루어져 왔다.

여섯째, 북한은 1950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협정의 준수는 고사하고 육상, 해상, 공중으로 200여 건의 주요 위반 사건이 있었다. 북한은 대남 테러를 통하여 한국사회의 분열 책동은 물론 궁극적인 대남 적화통일을 획책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 **(3) 북한의 대남 테러리즘 전망**

#### **1) 북한의 대남 테러리즘 가능성 상존**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한 체제불안 요인이 가중되고 남한에 대한 체제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북한은 전쟁 준비를 통해 내부의 긴장감 조성과 적대감을 고조시키는 한편 미·북 핵 협상 이후 대미·일에 대해서는 유화자세와는 달리 남한에 대해서는 비타협적이며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였다.

2002년 월드컵이라는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상승분위기를 희석시키고 탈북자 문제 등과 관련된 보복 및 체제위기 타개를 위한 방편으로서 국내·외에서의 한국인 납치살해, 공관 및 중요시설 폭파 테러 등 북한

이 대남 테러리즘을 감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이 대남혁명 전략용으로 쓰이듯 북한 지역 임진강, 북한강 수계 상의 모든 댐들은 수공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유사시 사용할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 현재의 국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이 테러리즘을 어느 정도 자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유리한 상황이 전개된다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향으로 북한의 테러리즘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볼 수가 있다.

첫째, 북한이 자행할 가능성이 있는 테러리즘의 한 방안은 자체의 특수 공작요원을 이용한 테러리즘이다. 1983년 미얀마의 아웅산 폭파사건, 1986년의 김포공항 폭파사건, 그리고 1987년 KAL 858기 공중폭파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은 고도의 훈련을 받은 자체의 특수 공작요원에 의한 테러리즘이 예상된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고려할 때 북한의 공작에 의한 테러리즘은 신중을 기할 것이며, 북한의 소행이라 할 지라도 남한의 위장된 소행이라고 완강히 책임을 부인할 것이다.

둘째, 북한의 특수 공작요원들과 연계된 국제적인 조직을 이용한 테러리즘 형태이다. 1990년 4월 귀순한 북한 유학생은 북한이 리비아, 콩고, 쿠바 등 제3세계에 테러리즘 지원국과 연계하여 대남 테러리즘을 자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경고한 적이 있다.

북한이 테러리즘 지원국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65개의 국제 테러조직과 연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셋째, 국내의 급진 좌경세력과 연계된 테러리즘 가능성이다. 급진 좌경세력이 폭력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비판적인 여론이 확산되어 지지확득이 어려워지고 또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고립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핵심 분자들이 운동권에 잠입한다든가, 북한 및 일본 극좌파 테러리즘 조직과 연계하여 극렬 투쟁의 일환으로 테러리즘을 자행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 2) 주한미군 및 미군 시설물에 대한 테러 가능성

1990년대 이후 반미 테러리즘의 발생지가 다양화 되어 가고 있고, 테러리즘의 피해도 흉포화 되고 규모도 대형화 되어 가고 있다. 미국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지만 테러리즘이 국제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단독으로 테러리즘에 대항하기엔 여러 가지로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9·11 테러리즘은 미국으로 하여금 전 세계에 대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반 테러리즘에 대한 동참을 요구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였다.

북한은 대 우방관계와 적대세력과의 관계에서 한국에 비해 전략 환경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 세계가 혐오하는 테러리즘을 전문적으로 사용해오고 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적화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소로 간주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왔다.

특히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된 이후, 북한은 테러리즘을 통해 한·미간의 우호에 손상을 주며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라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며, 테러리즘을 통해 미군의 인명에 막대한 손상을 야기 시키거나 야기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임으로써 미국 내의 주한미군 철수 여론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북한이 사용할 수 있는 테러리즘의 방법은 소총, 로켓포, 차량폭발, 자살폭탄은 물론 대량파괴무기, 그리고 물론 ‘더러운 폭탄(dirty bomb)’<sup>40)</sup> 또한 사이버 테러리즘을 통해 미군이나 미국의 주요기간 시설물에 대한 전산망을 순식간에 마비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테러리즘을 통해서 북한은 미군이나 미군시설물에 대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해서 한국과 미국 간의 우호와 신뢰에 손상을 주며 반미감정의 조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주한 미군 철수라는 북한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

40) ‘더러운 폭탄(dirty bomb)’은 핵무기는 아니지만, 재래식 폭발물에 방사능 오염물질을 포함시킨 것이다. ‘더러운 폭탄’의 공격을 받을 경우, 재래식 폭탄의 파괴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폭발과 함께 방사능 오염물질이 광범위 하게 확산돼 피해가 훨씬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더러운 폭탄’이 폭발할 경우, 방사능 오염물질 때문에 피해복구나 인명구조를 위해 소방관이 현장에 쉽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진다. 노암 촘스키, 「실패한 국가 미국을 말하다」 (서울, 황금나침판, 2006), p.23.

려고 노력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은밀하면서 간접적인 테러리즘을 이용할 경우 국제적인 책임과 비난은 물론 보복도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매력적인 수단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 3) 핵무기와 미사일을 이용한 테러 가능성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그 동안 대부분의 핵 관련 정보당국의 평가는 북한의 핵실험 실행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북한이 개발 중이었던 플루토늄 탄은 도위원소의 불안정성뿐만 아니라 고폭 장치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해 핵실험이 꼭 필요할 것임을 예견했으나, 국제 환경에 따른 압박으로 인해 실행여부에는 확신을 갖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을 전격 시행함으로써 북한이 전반적인 핵 기술의 보유를 인정하게 만들었다. 2009년 5월 25일에는 2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표 3-5] 북한의 미사일 보유 현황

| 구 분           | FROG    | 240mm다<br>련장로켓 | 스커드B        | 스커드C        | 노동 I          | 대포동 I   | 대포동II         | ICBM             |
|---------------|---------|----------------|-------------|-------------|---------------|---------|---------------|------------------|
| 사정거리(km)      | 35-70   | 60-70          | 300         | 500         | 1,300         | 2,500   | 6,700         | 9,000-<br>10,000 |
| 탄두중량(kg)      | 450     | 90             | 1,000       | 500-<br>700 | 770-<br>1,200 | 1,000   | 700-<br>1,000 | 1,000            |
| 수 량(1999)     | 100-450 | >10,000?       | 200-<br>650 | 180-<br>550 | 70-95         | -       | -             | -                |
| 수 량(2010)     | ?       | >10,000        | 200-650     | 300-700     | 70-95         | 150-200 | 50-75         |                  |
| 발사대당<br>미사일 수 | 4-10    | 60-500?        | 10-20       | 10-20       | 3-10?         | 2-3     | 2-3?          |                  |
| 비 고           |         |                | 작전배치        |             |               | 시험발사    | 개발 중          |                  |

\* 출처: 국방부, 『2008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09). p.269.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점점 더 심각한 군사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이유로서는 미사일 [표 3-5] 기술향상으로 사거리가 연장되어 한반도, 동

북아는 물론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핵무기, 화생무기 등 비재래식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운반체계에 사용될 수 있으며, 유사시 탄도미사일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방어체계의 구축이 용이하지 않으며, 북한 미사일이 제3국이나 테러리스트들에게 수출되어 해당 지역 및 세계평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2. 도난 핵물질 활용한 테러 위협

많은 제 3세계의 잠재적 핵보유국들은 성숙한 핵 강국들보다 안정된 정부를 갖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핵무기가 내전을 치루고 있는 내부의 민족적 조직이나 정치적 혼란을 이용하고 있는 테러조직의 수중에 떨어질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최근 파키스탄의 ‘핵시설 추정’ 공군기지(이슬라마바드에서 50km 떨어진 아토크 지구 캄바라 공군기지) 대한 탈레반의 자살 폭탄테러리즘이 발생하여 세계에서 핵물질 도난, 혹은 탈취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sup>41)</sup> 또한 제 3세계의 잠재적 핵보유국들은 합리성이나 자제력이 취약하며 비타협적인 지역분쟁에 휘말려 있다.

제 3세계의 많은 분쟁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불안정, 종족 갈등 등의 위험들은 국가 간의 전쟁에서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핵 테러리즘의 경우 테러리스트의 주장은 간단하고 위협적이며 ‘억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살적’인 것이다. 그들은 적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다른 수단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테러리스트가 되었다.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은 핵 공갈 또는 핵테러가 성공할 것 이라는 주장에 대해 핵무기의 보호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향후 핵무기를 보유하는 국가들의 증가로 테러리스트들에게 핵무기를 도난 당할 기회는 증대될 것이다.

테러조직을 포함한 준 국가 집단 또는 초국가적 집단이 훔친 플루토늄

---

41) 중앙일보, 2009. 10. 24. 10면.



이나 농축된 우라늄으로 독자적 핵 폭발장치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반적으로 핵폭탄을 제조하는데 기본적 요소는 핵물질의 획득이라 생각된다.<sup>42)</sup>

중소국가를 포함한 테러리즘집단이 플루토늄의 재처리와 재순환 및 원자력 연료 사이클의 주요부분을 도입할 경우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킬 가능성은 충분하다. 더욱이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고속증식로가 상업적으로 발전하는 추세에 따라 더욱 큰 두려움을 주고 있다.

프랭크(Forrest Frank)는 핵 불법 행위의 동기에 대하여 ①국가 간의 지나친 경쟁과 반복, ②시민전쟁, 테러리즘과 같은 집단파벌간의 증오, ③자체적 또는 부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포의 조성, ④금품요구의 공갈 및 향후 계속될 위협에 대한 신뢰성수립을 위한 욕망, ⑤폭탄제조를 위한 특수 핵물질의 구입에 대한 욕망, ⑥테러, 살인, 공갈을 하기 위한 방사능 폐기물질 획득욕망, ⑦가학적 동기, ⑧극단적 자살 및 살인의 동기, ⑨선전 효과, ⑩정신병적 동기 등을 들고 있다.<sup>43)</sup>

전 세계에는 약 3만개의 핵무기가 상존하고 있으며, 이 중 수백 개의 핵무기들이 테러리스트들과 범죄자들의 도난에 방치되거나 노출되어 있다.

테러리즘 집단인 움진리교(Aum Shinrikyo)와 알카에다(al-Qaide)가 이미 핵폭탄 구입을 시도한 바가 있듯이 테러리즘 그룹들이 핵무기 구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한 현실적인 문제이다.<sup>44)</sup>

국가차원에서 테러집단에게 핵무기를 의도적으로 넘겨주는 일은 흔치 않을 것이다. 이유는 넘겨준 핵무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와 국제기구들에 의한 보복, 핵무기로 무장한 테러집단에 의한 쿠데타 발생, 또한 원천적으로 핵무기 획득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실 등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해준다.

그럼에도 북한은 2005년 2월에 핵무기 소유를 선언하였으며, 향후 더 핵무기를 생산할 의지가 있음을 발표하였다. 이는 북한이 예전에 미사일 기

42) 김석용, “한국의 핵개발 문제에 관한 연구”, 『국방연구 제 19권 2호』 (서울 : 국방대학원, 2006), p.269.

43) Augustus R. Norton and Martin H. Greenberg(eds.) Studies in Nuclear Terrorism(Boston : Massachusetts G. K. Hall and Co, 1979), p.207.

44) 여영무, 『국제테러리즘연구』 (서울 : 해양전략연구소, 2006), p.346.



술을 타 국가들에게 판매한 과거 행적을 고려할 때 국가차원의 핵무기 판매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국가적 차원보다는 군사업무 관계자 또는 이 분야에 근무하는 과학자들이 이데올로기 또는 재정적인 이유로 테러리즘 집단에게 핵무기, 핵물질, 핵기술 등을 넘겨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sup>45)</sup>

베이커 의원은 당시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해 ‘구소련 내에 4만개의 핵무기 혹은 8만개의 핵무기들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불안정하게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은 나를 소름끼치게 하고 있다’라고 실토하였다.

1997년 엘친 대통령의 국가안보 담당보좌관인 알렉산더 레베트(Alexander Lebed)는 132개의 KGB용 특별 손가방 핵무기들 중 84개가 러시아에서 분실되었다고 확인했다.

이들 핵무기는 초소형 핵무기들로서 개인 휴대용 가방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0.1또는 1kt 급이었다. 러시아 당국의 완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구소련으로부터 러시아로 넘어오는 전환기 때 20여개 이상의 핵무기들을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들을 분실했다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에 북한의 테러 수행기구나 이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도난된 핵물질이나 북한에서 유입한 소형의 핵무기를 휴대시켜 한국의 중요시설이나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여 테러를 가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대 테러리즘 정책이 강화되고 요구되겠다.

### 3. 원자로 및 핵시설 파괴 위협

갤럽연구소는 미·소간의 핵 테러와 관련하여 비참한 핵사고가 심히 우려되는 위기를 경고하면서, 향후 테러리스트들은 핵발전소를 공격하여 이를 빌미로 정치적 협상을 요구할지 모르며 만약 그들이 실제로 핵 폭발장치를 획득하게 되면 폭파 또는 폭파를 전제로 위협을 가할 것을 가정하고 있다.

---

45) Gavin Cameron(2005), op.cit, p.18.

핵테러리즘에 의한 대형 사고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핵통제 위원회(United State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는 핵의 안전성 연구를 강조하면서 각국의 단순한 핵시설의 관리가 아닌 정치문제로서의 태도를 염려하고 있다.

핵확산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국가안보의 문제로 핵시설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고농도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생산한다.

이미 제조된 양으로도 테러집단들이 핵폭탄을 제조하기에는 충분하며 전문가들은 현재 핵발전소를 가동하거나 건설 중인 국가의 약 1/3이 제 3세계에 있음을 주시하고 있다.

핵전문가들은 핵 산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에 대하여 테러리즘 가능성에 상당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으며, 핵 원자력의 시설은 테러리스트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 그리고 미래의 새로운 양상은 테러리스트들이 향후 원자력에 의존하게 될 것이며 많은 시설과 핵산업의 확산이 테러리스트들에게 매력적인 목표가 되어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sup>46)</sup>

미국의 경우, 아마도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주요 도시지역에 근접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하여 도보로 이동하는 테러리스트 특공대나 대형 항공기를 이용하여 공격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한 공격은 원자로를 파괴시키고 수백만 명의 엄청난 인명피해를 초래할 것이다.<sup>47)</sup>

원자로와 농축, 저장, 재처리가 이루어지는 핵연료 처리 시설들은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에 무방비 노출되어 있으며, 주변에 심각한 방사능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다분히 이론적이긴 하지만 만약 테러리스트들이 비행기나 트럭을 이용해 핵시설들을 폭파 시키면 핵물질을 살포 시키는 것과 같을 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테러리즘 집단이 핵물질의 냉각과정이나 수용 과정에서 안전장치를 손상시켜 누출시킬 가능성도 결코 배제 할 수 없는

46) Michel Flood, "Nuclear Sabotage, " Studies in Nuclear Terrorism, p.123~124.

47) 1991년 이래 핵규제위원회는 81회에 걸친 테러리스트 공격을 시험하였으며, 이중 방사능을 방출할 정도의 37차례의 공격이 성공하였다.

일이다.

이에 미국은 주기적으로 연합정부의 요원을 통해 모의 침투훈련을 실시하고, 이례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핵물질 사용 및 원자력시설의 이용확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방사능테러는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인접국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 물리적 방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현재, 한국은 자원 고갈에 대비하여 원자력 발전시설을 울진, 월성, 영광, 고리 등에 20개가 운용 또는 건설중에 있으며, 앞으로 많은 원자력발전소가 증설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원자력 발전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국가 물리적 방호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sup>48)</sup>

국가 물리적 방호체제는 이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위한 법·제도 체제, 법 및 제도를 바탕으로 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 현황을 파악하고 규제하기 위한 이행체제, 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에 대한 내·외부 위협에 대한 평가와 기준마련을 위한 위협 평가체제, 방사능 물질을 사용한 테러를 방지하고 발생한 경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사능테러 예방·대응체제 및 IAEA등의 국제기구 및 주변국들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관련 정보 및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 협력체제로 구성하고 있다.

또한 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와 관련된 업무는 1995년 원자력법의 개정 이래 추진되었고 보다 강화된 원자력 방호방재법이 2004년에 발효됨에 따라 국가 물리적 방호 체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법적 기반이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물리적 방호 관련 중요정책, 방호체제의 수립 및 방호체제의 평가사항등을 심의하기 위한 최고심의 기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

48) 교육과학기술부, “2010 원자력 안전백서”, p.329-337.

의장으로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의 차관이 위원인 물리적 방호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내의 원자력 방재팀은 국가 물리적 방호 정책 수립 및 물리적 방호 이행·평가를 총괄하고 있다.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 이행상태 점검 및 재난 발생시 현장 대응을 원활히 하기 위해 원자력시설이 위치한 곳에, 2005년 월성을 시작으로 2010년 2월 고리 방사능방재센터까지 총 5곳의 방재·검사, 정책 및 기술 지원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 시설에 대한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이 설치되어 방사능 누출까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좀 더 구체적으로 대테러와 관련 북한의 특수전 부대 또는 민간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 위협에 대해 어느 정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국과 주변국들의 테러방지 대책을 비교하여 많은 연구와 발전의 필요성을 느낀다.



## 제 4 장 북한의 핵 테러리즘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

### 제 1 절 국제레짐을 통한 공조노력

#### 1. 유엔 제재결의안(1718호·1874호·1887호) 이행 촉구

유엔 제재결의안은 유엔헌장이나 국제법 및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여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침해하는 국가에 대하여 유엔안보리를 중심으로 취해지는 강제조치에 관한 규범과 원칙, 그리고 의사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2006년 7월 5일 동해상에 7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10월 6일에 핵실험을 강행하자, 안보리는 10월 14일에 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대북한 제재를 촉구하였다.

1718호는 북한의 핵실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대해 6자 회담 복귀, 9. 19공동 선언 이행, NPT복귀, 국제 원자력기구(IAEA)의 안전협정 준수를 촉구하였다. 이와 동시에 대북 핵관련 물자 및 사치품 수·출입 금지, 제한적 금융제재, 여행제한, 북한 화물 검색 협력 촉구를 제재시켰다.

이 결의안의 특징은 핵실험과 관련하여 유엔이 부과한 최초의 제재조치로 안보리 이사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점에서 비핵화를 위한 유엔 및 국제사회의 단호한 입장 표명이었으며,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요구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혀 군사적 제재를 배제한 수준으로 채택되어 강대국간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정치적 타협이었다는 평가와 유엔의 모든 회원국에게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구속력 있는 결정이었으나 현재의 구조상 회원국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존하는 형식이었다는 아쉬움이 있다.<sup>49)</sup>

이후 북한은 2009년 5월 25일 제 2차 핵 실험을 하게 되자 유엔은 1718

49) 박홍순, ‘북핵 사태와 유엔 제재’(공사 개교 60주년 학술회의, 2009), pp.84-88.

호의 위반으로 강하게 비난하고 6월 12일에 1874호를 채택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무기 금수(Arms Embargo - 모든 무기의 수·출입 금지), 금융 제재(Financial Embargo), 선박 검색, 제재 전문가 위원회(7인 이내) 구성 등으로 군사제재를 배제한 대신에 경제적, 군사적 압박을 가해 왔다.

2009년 9월 25일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주재한 안보리 정상회의에서 1887호를 채택하고 핵 위협국가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sup>50)</sup>

채택된 결의문은 핵무기 및 핵물질의 확산 방지, 핵 실험 금지를 위한 회원국의 노력, NPT체제 강화들을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특정 국가를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북한을 겨냥한 압박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핵 실험과 유엔의 제재 조치와 더불어 한국정부는 유엔 결의안에 지지를 일관성 있게 표명하였으나, 한반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과도한 압박을 자제하였으며, 대화의 틀로 유도하기 위한 6자회담 복귀, 정상회담 개최,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 추진 등이 있었으나, 북한의 변화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평가와 큰 기대를 갖지는 못하고 있어 국제기구를 통한 강력하면서도 크게 자극하지 않는 범위를 조절해 나가는 방향과 노력이 필요하겠다.

## 2. 단계적인 국제공조 추진

북핵 국제공조는 북핵 폐기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참여 국가들과 협상을 통한 적극적인 공조를 거쳐 조화가 이루어지고 도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sup>51)</sup>

북핵 국제공조는 2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단계는 북한을 제외한 5자 공조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5개국이 북핵 폐기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상태이며, 국제사회와 북한이 핵을 폐기하도록 합의하고, 이를 이행한 상태를 의미한다.

50) “안보리 핵 정상회의 결의-내용과 의미”, 연합뉴스(2009. 9. 25)

51) Robert O. Keohane,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State Power* (Boulder: Westview Press, Inc., 1989), p.11.

미국과 한국은 강력한 북핵 국제공조를 실현하기 위해 참여국들의 정책을 변경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핵보유 정책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도 하고, 북한의 핵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과 군사적 충돌을 통제하는데 활용하기도 한다.

### (1) 국제공조 추진 과제

북한의 핵폐기를 위한 국제공조 추진 과제는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북한이 핵보유에 대한 이익보다 비용을 증가시키면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며, 국제 사회가 공조를 기반으로 강력한 제재를 실행해서 핵보유 비용과 불이익을 증가시키면, 핵 폐기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북핵 해결과정은 핵 보유 이익보다 비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온 과정으로, 북한에게 경제적·외교적·군사적 수단으로 구성된 보상과 제재를 사용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보상은 경제적 지원과 안전보장이다. 먼저 미국이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은 북미관계 정상화, 무역협정 체결, 경제제재 완화, 국제금융기구 가입 허용, 연료 및 식량지원, 개성공단 생산제품 특혜 허용 등이다.<sup>52)</sup>

또한 이명박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은 북한의 핵 폐기와 개혁개방을 추진하면, 10년 안에 1인당 GDP 3,000달러를 달성하도록 대규모 경제 지원을 실행한다는 것이다.

대북 안전보장은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북한이 확실한 핵 폐기 의지를 보여주었을 때 논의를 시작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가 현실화된 단계에서 진전될 수 있다.

다음으로 국제 사회는 문제해결을 위해 다자 대화인 6자회담과 북미 양자대화를 활용하는 것이다. 비확산레짐과 같은 다자기구에서는 목표달성을 위해 다자외교와 양자외교를 최적의 상태로 결합하고 있다.

---

52) Dick K. Nanto, Emma Chanlett-Avery, "North Korea: Economic Leverage and Policy Analysis," August 14, 2009, CRS Report for Congress, p.10, pp. 5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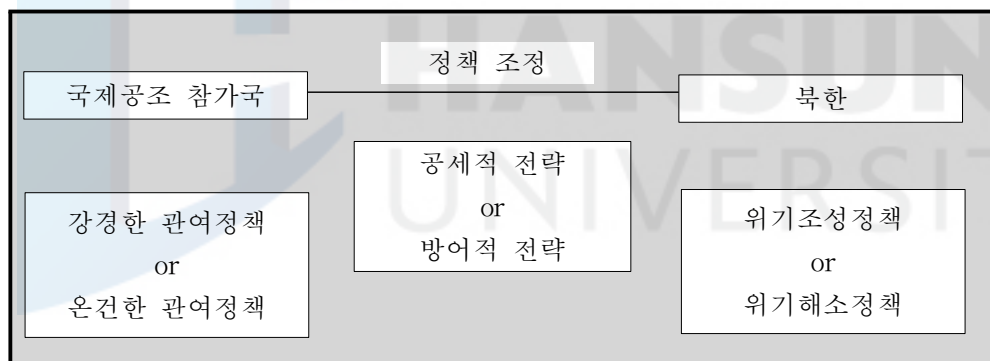
다자외교는 거래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한 가지 거래가 모든 참가국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레짐 순응비용이 높은 개별국가들의 참가를 끌어내기 위해서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양자외교는 레짐을 설립한 국가들이 각 국가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할 수 있으나, 거래비용을 증가시키고 각 국가들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순응비용을 가진 국가들은 양자거래를 진행해서 다자외교를 보완해야 한다.

## (2) 국제공조의 실행

국제공조 참가국은 북핵 폐기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정책조정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상변경을 시도하면서 상황 [표 4-6] 에 따라 공세적 전략과 방어적 전략을 구사하고, 위기가 진행됨에 따라 자신들이 구사한 조기전략을 변경하기도 한다.<sup>53)</sup>

[표 4-6] 북핵 국제공조의 실행



\* 출처: 김태준, 『테러리즘-이론과 실제』 (서울, 붕명, 2006), p.437.

공세적 전략에는 방어자가 적에게 피해를 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다양한 형식으로 무력사용을 위협하는 조치들이 있다. 또한 도전자는 자신의 선호에 맞게 현상을 변경하기 위해 방어자의 대응을 예측해서 다양한 공세

53) Alexander L. George, "Strategies for Crisis Management," Alexander L. George, ed., *Avoiding War* (Boulder: Westview Press, 1991), p.393.

적 전략을 사용한다.

그동안 국제공조 참가국들과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현상을 변경하기 위해 군사적 수단사용 위협, 경제제재, 대화 중단, 핵 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공세적 전략을 구사했다.

방어적 전략은 방어자의 대응이 원하지 않는 위기고조를 유발함으로써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사용된다. 방어자는 도전자들의 현상 변경 노력을 좌절시키기 위해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회피하면서 자국의 이익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을 취한다.

방어자는 도전자가 자신의 방어 전략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예상해서 정책을 선택해야 위기고조를 막을 수 있다.<sup>54)</sup> 북핵 국제공조에서 방어적 전략은 대화 복귀와 재개, 인센티브 제공, 합의 도출(9. 19공동성명, 2. 13합의)등이 있다.

또한 국제공조 참가국들은 해당 정부의 대북인식에 따라 강경한 관여정책과 온건한 관여정책을 취하고, 북한정권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위기조성정책과 위기해소정책을 실행한다.

강경한 관여정책과 온건한 관여정책은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억제와 관여가 옳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북한의 위협과 변화 의지를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

강경한 관여정책을 선호하는 행위자들은 북한의 위협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고, 북한의 개혁과 국제체제로의 통합과 같은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이며,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려면, 강력한 제재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온건한 관여정책을 선호하는 행위자들은 북한의 위협을 약하게 인식하고 있고, 북한의 개혁과 국제체제로의 통합 등 변화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갖고 있다.

이들은 강압 협상전략과 같은 제재정책은 위기를 고조시키고 위협을 증가시키는 부정적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sup>55)</sup> 이러한 시각을 가진 연구자들은 북한이 미국에 의한 체제 위협 때문에 핵을 개발한다고 보고 있다.

54) Alexander L. George, op. cit., pp.379-392.

55) Victor D. Cha and David C. Kang,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 p.70,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나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자신들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위기조성정책과 위기해소정책을 구사한다.

북한의 위기조성정책은 NPT 탈퇴, 6자 회담 중단, 핵 실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시인 등이 있고, 위기해소정책은 핵시설 동결, 9. 19합의, 2. 13합의, 9. 3합의, 6자 회담 참가, 영변 냉각탑 폭파 등이 있으며, 핵능력을 증대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을 실시함으로써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통해 일정한 목적이 달성되면, 국제사회의 제재를 약화시키기 위해 핵 폐기라는 목표에 동의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협상에 복귀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핵보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위기조성과 위기해소를 병행하는 행동패턴을 보이고 있다.

## 제 2 절 주변국과 협조체제 강화

### 1. 오바마 행정부의 핵군축정책과 한미동맹체제 공고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초기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한이 진정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위해 준비가 되어있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영구평화조약 체결, 북한의 경제 에너지 지원에 기꺼이 응하겠다”<sup>56)</sup>고 선언하였고, 북핵문제도 무난하게 해결되리라는 낙관론이 예상되었으나, 오바마 행정부는 국내 경제 회복, 중동정책 및 반테러전쟁 등에 전념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선의의 무시’ 정책을 펼쳤다.

---

56) Remarks by Secretary at Asia Society in New York, "Clinton Looks forward to working with trans-pacific partners on Asia trip", America. gov. Feb. 13, 2009.

그러나 클린턴 국무장관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를 계승하는 듯한 입장을 표명하고 한·미간 키 리졸브 훈련을 강행하면서 점차 북한의 대미 입장은 강경해졌다.

이에 북한은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였고, 이에 오바마 행정부도 '선의의 무시'에 입각한 대북 강경책을 펼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 제재로 대응하였다.

유엔 안보리도 대북 비난성명을 채택하자 북한은 6자회담 불참, 핵 불능화 작업 중지 및 시설 복구를 선언하고 핵 시설에 대한 국제 감시단을 추방하였으며, 핵 재처리 작업에 돌입했음을 선언하였다.

한국정부에 대해서도 전략과 로켓발사에 대한 제재 필요 강조 및 PSI 전면 참여 입장에 대응하기 위해 PSI 전면 참여는 전쟁 선포 행위이므로 군사적 충돌을 불사한다는 강경·대립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강경 입장을 취하자 미국에 대해서도 초 강경책으로 맞서는 전방위 '벼랑끝 전술'을 구사했다.

그것은 북한이 원하는 북·미간의 협약을 위해 북한의 핵 능력을 극대화하여 북한의 핵 포기에 대한 보상을 극대화하거나 아니면 아예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2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이에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무기 금수, 화물검색, 금융제재 등 강경 대북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 187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을 강화하였고 북한은 이에 대응해 우라늄 농축 작업 착수,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의 전량 무기화, 봉쇄시 군사적 대응 등 3개 조치를 선언하는 등 대외 강경책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대외강경책의 배경을 보면, 오바마 행정부에게는 대북 대화를 서두르게 하고, 남한 정부에게는 대북 정책을 수정하라는 압박이며, 북한 체제 유지와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증진을 통한 대외 협상력 강화라는 다목적용 전략적 결단에 의거한 것으로 평가된다.<sup>57)</sup>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국이 핵무기 감축과 그 영향에 대해 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의 일방적인 수혜자란 점과

57) 윤정원,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북핵문제와 우리의 대응책,” 『전략 연구』, 제XVI권 제 2호, 통권 제 46호(2009년 7월), p.118.

한미동맹의 군사적 역할분담을 감안하면 더더욱 한국의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드물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개발이 급진전을 보이는 상황에서 핵확산과 핵무기의 효용성 문제를 더 이상 남의 얘기만으로 간주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주도적이지는 않더라도 오바마 행정부의 핵군축 구상의 추진과정과 향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국익차원에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1세기의 전략동맹의 개념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북한보다 우위의 수준이 되도록 도달시키고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 2.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유지

중국은 북핵문제가 대두된 2002년 10월 이후 북핵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평화적인 해결과 양자간의 대화에서 다자간의 대화에 이르기까지 대화를 통한 해결을 계속 강조해 왔다.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불용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미국이 보다 적극적인 북한의 안보 우려사안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6자회담을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역할과 비중을 증대시키는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sup>58)</sup>

중국의 동북아 전략의 핵심은 중국 경제성장과 번영을 지속하기 위한 미국과의 관계 안정화이며,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해 미국의 다자회담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도록 하는 한편 전통적으로 해오던 북한의 안전 보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표명으로 북한을 옹호하는 이중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핵문제와 관련된 중국의 전략적인 이익은 북핵문제 해결과정과 그 이

58) 박영호 외,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전망”(통일정세분석 2005-04, 통일연구원), pp.12-13.

후에 나타날 동북아전략구도에 대한 것이며 중국은 6자회담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전략구상을 기초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sup>59)</sup>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포함하여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미국 및 다른 강대국들과 긴밀한 협조 하에 새 질서를 구축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이 향후 다자안보 대화를 통한 동북아 질서 확립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북한의 제2차 핵 실험 이후 변화하는 중국의 대북인식은 중국의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중국의 ‘환구시보’가 최근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핵 실험이 어느 국가에게 가장 위협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중국 국민들은 한국(42%), 일본(25.5%), 중국(25.2%)의 순으로 대답했으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인들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경우 중국과 일본에 비슷한 수준으로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북한의 제2차 핵 실험 이후, “북한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중국인들은 66%가 “그렇다”라고 대답하였다.

북한이 중국을 대상으로 핵을 사용할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들이 북한에 대한 제재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게도 핵개발을 할 권리가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의 적대 봉쇄정책 때문이다”라는 반응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이슈는 과연 중국이 북한정권이 붕괴될 정도로 강력한 대북제재에 협력할 것인가의 문제다.

중국의 이러한 모순된 태도를 검토해 보면,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면서도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하여 북한정권의 붕괴나 한반도의 전쟁을 용인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바마·이명박 정부의 정책 전환과 이에 따른 북한과의 협상에 의하여 북한이 위기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볼 때 북한의 실

59) 이태환, “북핵 문제에 대한 주변 4강의 입장과 전략”, (정책보고서 '05-2호, 세종 연구소, 2005), p.230.

절적인 비핵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들이 좀 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과 같은 상황적 배경에서 중국은 다음 몇 가지 딜레마적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또 다른 핵 실험 내지는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진행된다면 북한은 더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에 직면할 것이며, 이와 아울러 중국은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장을 반영해줄 수가 없다.

둘째, 한국과 일본의 핵 재무장 시도이다.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댄가로 핵 재무장을 포기한 상황이 되었지만, 북한 핵에 대한 방어적 대안으로 이들 두 국가들의 핵 무장 재시도는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셋째, 북한의 붕괴이다. 김정일의 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따른 북한 지도자의 계승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붕괴 가능성은 어렵지만 현실 가능성이 큰 주제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북 군사적 제재이다. 이 대안은 사실 현실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가 외교적으로 제어될 수 없다는 점이 증명되는 경우 좋은 대안은 아니지만 가능성 있는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북한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북한의 경제적 붕괴위험이 나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대북한 태도를 바꾼다면 이는 북한정권의 긍정적 변화를 초래하는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또한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변화는 향후 슈퍼파워로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인식을 유도하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북한의 핵 위협이 중국의 경제발전에 불안정적인 요소로 확대됨에 따라 중국은 대북정책을 변화할 수 있다. 북한정권 유지를 위한 중국의 노력에 변화가 온다면 이는 한편으로는 북한의 미래에 대한 치명적인 조치가 될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조치



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전략적인 동반자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협력관계를 심화시키고, 사회·문화 등 다차원적으로 교류를 추구해야 하겠다.

또한 중국이 한·미동맹 강화의 모습이 미국에 편입된다는 모습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한국 외교에 중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미동맹이 한·중관계를 악화한다는 의미를 심어주지 않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3. 기타 국가들과 대북 정책 공고화

#### (1) 러시아의 대북정책 공조 유도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러시아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불가피하게 일본 등 지역내 국가들의 핵무장 등 군비 증강을 촉진시킬 것이며, 또한 여타 지역, 특히 러시아 남부 이슬람권 국가들로 이들 대량살상무기 및 이의 운반수단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는 구소련시대부터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및 이의 운반 수단의 확산을 저지 또는 축소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예: NPT, CTBT, MTCR, CWC, BWC 등) 또는 미국과의 양자 노력(예: START I, SALT 등)에 적극 동참해 왔으며, 이러한 정책은 러시아의 공식적인 외교·안보문건들(예: 국가안보개념, 군사독트린, 외교정책개념 등)에 명시되어 있다.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러시아는 ‘일괄 타결(Package Deal)’ 방안을 제의하였다. 그 내용은 한반도 비핵화 및 제네바 합의 등 국제적 의무 준수, 양자 및 다자 차원의 대화재개 및 이를 통한 대북 안전보장 제공, 대북 인도적·경제적 지원 재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자안전보장’ 방안은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구상이다.

최근 북핵문제를 통해 러시아의 발언권은 크게 신장하고 있다. 러시아의 동아시아 전략은 중국과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미국을 견제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러시아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가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안정은 물론 지역내 국가 간 군사적 충돌, 군비경쟁 등을 억제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의 이해 당사자로서 한반도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주변 3국과 세력 균형을 유지하면서 러시아의 전통적 역할이 최소한 유지되거나 또는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기본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 및 국제적 비확산 체제의 유지, 제네바 합의 준수, 다자 또는 양자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3가지 원칙이다.

러시아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북한 난민 유입 등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에 대응한 주변국들의 대응은 이해관계의 차이로 불가피하게 긴장과 갈등을 유발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적극 지지하고 있고, 이를 위한 양자 및 다자 접근을 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러시아는 북한의 핵폭탄기술이 소형화하면서 러시아의 체첸과 같은 독립추구세력에게 핵기술이나 핵물질이 전파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는 미국주도의 PSI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sup>60)</sup>

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최근 정상회담을 통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경제협력을 통해 더욱 증진하고 있으며, 러시아를 북한의 핵과 6자회담의 한 축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며, 지속적인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2) 일본의 테러예방 대책 공조

일본은 테러대책에 있어서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며, 테러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할 때마다 국내법을 정비하는 정도에 그치는 등 1980년대 이전까지 비교적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는 형태로서 입법정책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1995년 동경 지하철 독가스 테러사건을 계기로 그 이후, 1999년 ‘무차별 대량살인행위를 행한 단체의 규제에

60) 김명섭, “북한 핵실험 이후 동북아질서 변화와 한국의 대외정책 방향”, (한국국제정치학회연례학술회의, 2006), p.135.

관한 법률로 제정하여 테러입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으나 다른 선진국들과 같은 테러에 대한 특별한 형사법적 입법을 하지 않았다.

단지 테러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을 실시한 바, 주로 테러의 예방을 위한 치안강화 및 테러발생시 신속한 진압 혹은 테러대응요령에 관한 대국민 홍보 등 행정적인 조치에 치중하였다. 따라서 테러행위가 현행 형법상 범죄에 해당될 경우 그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며, 이 경우 테러에 대한 특별한 취급은 인정되지 않고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형사절차에 따라 처벌하였다.

식품과 관련하여 유통식품에 독물을 혼입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 생활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유통식품에 독물의 혼입 등의 방지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처벌되도록 하고 있다.

9·11 테러사건 이후, ‘테러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타국 영토까지 확대하고, 자위대의 전투시 해외 파견을 처음으로 허용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한편, 2001년 9월 25일 수상을 본부장으로 하고 관방장관을 부본부장, 법무대신, 총무대신, 외무대신, 재무대신 등으로 구성되는 국제테러대책본부를 경찰청에 설치하여 ‘국내테러 대책 중점추진사항’을 마련하였으며,

2001년 11월 2일에는 미국의 테러 보복공격에 자위대를 지원하기 위한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경찰이 담당해온 일본 내 미군 시설과 자위대 시설 경비를 자위대가 담당하도록 하기 위한 ‘자위대법개정안’과 의심 선박에 대한 선체 사격을 허용하는 ‘해상 보안청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테러 대응과 관련한 국가정보기구로는 내각정보조사실과 방위청통합조정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각 정보조사실은 총리의 직접 지휘 하에 있으면서 총리의 외교 및 국방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는 연구와 분석·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1952년 총리부 설치령에 의거하여 내각 관방장관 산하에 내각조사실을 창설하였으나 1986년에 내각정보조사실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능을 강화하

였다. 이 기구는 미국의 중앙정보국(CIA)과 같은 통일된 성격의 국가정보 기관이 아니며, 타 정보기관과의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부분 정보 기관에 대한 조정·통제기능은 없다.

한편, 방위청통합조정본부는 1996년 5월 방위청 통합막료회의 산하에 통합정보본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방위청설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1997년 1월 각 군별로 분산되어 있는 전략정보 수집·분석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창설되었다.

본부장 예하에는 총부·기획·분석·영상(화상·지리부)·전파해석 등 5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임무는 러시아·중국·한반도 등 극동지역의 군사정보와 중동·중남미·아프리카 등 평화유지활동(PKO : Peace Keeping Operations) 파견지역에 대한 정보수집과 내전에 의한 기아, 난민 문제, 국제 테러리즘 등에 대한 정보 등을 수집·평가하여 방위청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듯, 일본은 자국의 안정을 위하고 테러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 한국의 핵테러리즘을 비롯한 대테러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가까운 일본의 대테러 정책을 비교 연구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 제 3 절 WMD군축과 Grand Bargain적극 추진

#### 1.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WMD)의 확산 억제

2005년 북한 핵보유 선언 이후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2006년 7월 대포동 2호의 시험발사 후 안보와 자주, 자주와 비용의 문제로 쟁점화 되었다.

쟁점의 원인이 되는 것은 한국군이 단독으로 작전수행능력이 있는가 여부와 없다면 미군에 의존함으로써 유지되어 온 남북한 간의 군사적 균형

이 깨지는 것을 우려함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은 한·미 동맹관계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것이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놓고 미국과 내부적으로 고통을 겪는 것은 바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로 인한 한·미간의 안보 동맹체제의 균열로 남북간 그리고 열강으로 둘러싸인 지정학적인 입장에서 군사적 균형의 상실을 우려함이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논의와 환수 시기는 우리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논의되고 환수되어야 저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달성하는 것임을 확신한다.

이미 시작된 문제인 만큼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경제적인 비용 부담과 안보적인 불안감이 최소화 되는 가운데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은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의 국제적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미국의 주도 아래 2003년 6월 에스파냐 마드리드에서 발족하였다. 미국이 클린턴 행정부 말기 때부터 추진한 대량살상무기 반확산 전략을 국제적으로 발전시킨 개념이다.

이 구상에 따르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공유는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국의 합동작전도 가능하다.

또 인신매매 금지나 마약·위조지폐 등의 밀수와 마찬가지로 대량살상무기의 밀수를 각국의 국내법으로 저지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이 제기되게 된 배경으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둘러싼 위기 해결을 위한 공동협상을 추구하는 동시에 한편으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억제를 목적으로 미국이 중국, 러시아, 한국에 로비활동을 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보아 대상국이 북한이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이 그동안 강력하게 추구해 온 대북제재중 하나로 PSI를 두고 “대화와 협상을 거부한 제재만으로 북한을 굴복시킬 수 없을 것”과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나 UN 제재 결의만으로는 북한을 굴복시키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후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극단적인 수단으로써 대이라크와 같은 전쟁이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대안을 모색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대내외적으로 이라크전의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는 교훈으로 볼 때 북한과의 전쟁을 감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과정을 통한 것인지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판단된다.

군사력 건설의 기본개념은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협력적 자주국방’ 능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불특정·비대칭·비정형화 되고 있는 지역적, 세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지난 세기에 어려웠던 역사 속에서의 고도의 경제성장과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 21세기 정보 및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른 무기체계 발전추세와 전쟁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면 한국군의 모습은 첨단무기체계로 무장된 정보화 및 과학화 군이 되어야 하며, 빠른 시일내에 그 능력을 갖추어야만 할 것이다.

‘6자회담’은 현안의 북핵 및 미사일 문제에 대한 유일의 평화적 해결책으로 다수가 공감하는 반면 그동안 4차례의 6자회담을 진행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만족할만한 성과는 미흡하였다.

이것은 ‘6자회담’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과 적용되는 동북아지역의 환경적 요소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함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다자주의 원칙을 기초로 가졌으나 그 한계를 엿볼 수가 있겠다.

첫째, 다자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6개국 간 협상의 일반화된 원칙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을 회담에 참여시키기 위해 남한 및 중국 등이 부단한 노력은 했으나 회담은 미국의 일방성에 의해 진행되어 온 것이다.

둘째, 6자회담은 기본적으로 관련국가간 쌍무동맹관계가 회담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국가간의 평등성을 전제로 하는 다자협력체

의 본질에도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본적인 동맹의 양대 축이 한·미·일과 북·중·러로 형성되어 각축대에서는 입장의 유사성을 보여왔던 것이다.

셋째, 각 국가들의 목표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으로 미국은 세계전략 및 동북아전략의 일환에서 추진하면서 협상의 대가는 한·중·일·러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미국의 의도에 대해 참여국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

넷째, 다자협력체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상호신뢰 구축이 미흡하다. 상호불신의 북·미관계를 비롯하여 북·일간의 적대적 대립관계로 인하여 상호신뢰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은 6자회담의 기본적인 틀을 견지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제시되었던 6자회담의 한계를 다자간의 ‘일반화된 행위원칙’에 부합될 수 있도록 분야별 검토와 6자회담 제국가간의 신뢰 회복, 북한과 미국이 ‘핵’이라는 공동의 무기를 이용하여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북미간의 전략적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2.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적극 시행

2009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미국 외교협회 초청 간담회 및 유엔 총회 연설에서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제의하였다.

그 핵심은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통합적 접근법의 필요성과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부분 폐기와 북한에 대한 확실한 안전보장과 국제지원을 본격화하고, 북핵 폐기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토대로 5자 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핵심 부분 폐기에 부응하여 5자가 북한의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위해 국제협력력을 통해 서로 요구사항을 한 묶음으로 주고받자는 통 큰 협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6자회담 참가국 간의 기본 전략과 접근방식이 상이하여 합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며,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지위나 입장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으며, 우리의 해결방안을 기본으로 5자가 한 목소리로 북한을 설득하고자 하는데 큰 의미를 들 수가 있겠다.

따라서 북핵 폐기를 통해 북한이 결정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5자 간의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계유지가 필요하겠으며, 이와 더불어 북한의 양면적인 행동, 대표적인 테러에 대비한 대책은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195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을 비롯한 요인암살, 납치, 항공기 납치 및 폭파, 무장공비 침투, 어선 및 공작선 침투 등 갖은 테러를 자행하여 국가지도체제를 마비시키고, 후방을 교란하며,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불안한 나라로 인식케 하는 등 대남혁명전략·전술을 꾸준히 전개하여 왔다. 따라서 향후 한반도에서 있을 북한의 도발이나 테러리즘에 대비한 작전 수행은 꾸준히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는 국제적 냉전 해체와 남북 화해협력시대를 맞이하여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비록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북한을 비롯한 국내외 각종 테러의 동향에서 알 수 있듯이, 한반도에서의 테러 발생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구체적인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첫째, 테러에 대비한 위기관리 및 확고한 군사대비태세가 유지되어야 한다. 테러 발생시는 한·미 연합위기관리 체제는 물론이고 한·미간 테러정보 공유 등을 상호 유기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추가적으로 발생가능 한 테러위협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미 수립된 국가 주요시설과 인원에 대한 방호계획을 수시 점검하고, 대테러 능력 향상을 위한 테러 첩보수집, 인원과 장비의 확보, 그리고 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잘못된 사상과 이념을 기반으로 한 테러는 동기여하를 불문하고,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국제분쟁의 원인이자 ‘평화의 적’임을 명심하고 미국을 비롯한 우방과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모방 테러도 예상되는 바, 테러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없으며 테러로부터 안전지대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이 적대적 분단 상태를 지속하고 있고 그간 수차례의 테러와 도발을 경험해 본 우리 입장에서는 9·11 미국의 대 참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도 이미 지난 1983년 미얀마 아웅산 폭탄테러, 1986년 김포공항 폭탄테러, 1987년 대한항공 858기 공중폭파 사건 등 테러의 공포를 체험한 바 있어 테러방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흔히 북한군은 요인암살 및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파괴 등을 할 수 있도록 특수부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충폭탄’을 기치로 자살특공대 요원들을 양성·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넷째, 위기상황 발생 시 조속한 안정과 질서회복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배양해야 한다. 9·11 사태 발생 후 가장 인상적인 것은 사후 대책마련과 복구 작업에 미국 정부와 국민들이 보여준 침착한 대응이었다.

특히 붕괴직전의 고층건물에서 계단을 따라 탈출할 때 보여 주었던 미국 시민들의 침착하고 질서 있는 행동과 시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역으로 계단을 올라가며 시민들의 탈출을 도왔던 소방관들의 살신성인 정신은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었다.

9·11 사건이 터지자마자 도시는 물론 미국전체가 대재앙의 충격을 딛고 수습에 나섰으며, 헌혈·구조대·자원봉사자가 곳곳에서 헌신하는 모습은 공황발생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

따라서 재해·재난 시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주요지역에서의 차량 및 신분검문, 교통통제 등이 있을 수 있겠으나, 유사한 상황발생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순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하겠다.

다섯째, 우리의 안보상황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전면전, 국지도발과 병행하여 테러, 국제범죄, 마약, 사이버 테러 등 새로운 형태의 안보위협은 물론 불특정 위협에 대비해야 된다.

여섯째, 북한을 비롯한 제2·3세력의 테러나 도발은 물론 전쟁이라는 인

류의 재앙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평소에도 철통 같은 경계 및 감시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우리 군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일단 유사시에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어 나가면서 대테러 작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핵테러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드린다면 국가안보 책임자와 정책 전문가들의 주기적이고 포괄적인 전략, 실천계획, 향후 목표달성을 위한 대안을 작성해야 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안을 염출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추구해야 할 절대적인 최우선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핵무기와 핵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기준과 핵 테러 방지에 사활적 이해를 공유하는 주요 국가들 간의 제휴를 가능하게 하는 대 핵테러 세계동맹의 결성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핵분열 물질 생산국(우선적으로 이란) 등장을 차단하고, 핵거래 암시장을 봉쇄(우선적으로 파키스탄의 핵거래 차단) 및 새로운 핵 보유국 출현 봉쇄(우선적으로 북한의 핵보유 봉쇄)와 대테러 세계동맹을 통한 핵 비확산체제의 포괄적 재검토 틈새 보완 및 취약점을 보강하고, 핵보유국의 자세를 시정하며, 핵무기를 국제정치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선포토록 하고, 테러 공격을 기도하는 테러 지도자와 단체를 제거하기 위한 테러와의 전쟁 수행하는 등의 국내 및 국제적인 사고와 노력이 필요하겠다.

## 제 5 장 결 론

지금까지 북한의 핵 테러리즘 위협에 대비한 대응전략을 연구하기 위해 테러리즘에 대한 일반적 고찰로부터 북한의 핵개발 수준과 핵 테러리즘 능력을 분석해 보고, 북한의 핵 테러리즘 억제를 위한 한국 및 국제공조노력에 대해 나누어 연구하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핵 테러리즘을 비롯한 전반적인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전략이 구체화 되거나 그 필요성에 대해 중요함을 인식하는 데는 많은 노력과 힘의 절집하다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다.

9. 11 테러 이후 미국은 테러지원에 대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불량국가로 지정된 북한은 세계가 인정한 테러 지원국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과 우리 정부의 북한의 핵불용이라는 대북정책의 기본원칙에 정면으로 대치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촉발한 ‘한반도 위기’가 증폭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위기관리체제를 운영하면서 6자회담 재개와 주도적인 역할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이 진실로 핵무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감없이 증명했다. 북한의 핵실험은 유일 초강국인 미국을 긴장하게 하였으며, 부상하는 지역패권국인 중국을 협박하였고, 유엔 안보리의 만장일치 요구를 경멸했다.

핵무기를 가진 김정일 정권을 비롯하여 테러리스트들이 핵무기를 가지면 보복을 가할 대상조차 분명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 더욱 위협적이고, 핵테러를 가할 가능성은 더욱 당면한 핵위협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취해야 하며, 이는 절대 절명의 과제이다.

유엔의 위협, 도전, 변화에 관한 고위급 위원회(UN High Level Panel on Threats, Challenges, and Change)는 현재 비확산체제가 총체적 위기

에 처해 있음을 경고하고 있으며, 그 주된 이유로 특정국의 NPT탈퇴, 회원국의 불이행, 새로운 국제적 위협의 등장 등을 꼽고 있다. 이 위원회는 “우리는 현재 비확산체제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침식되어 건잡을 수 없는 핵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 사태가 현실이 된다면 모든 국가들이 손해를 보게 되며, 특히 한국은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현대 테러리즘이 폭력적이고 무차별 대량 학살적이며, 대형화되는 이유는 그것이 개인적 폭력이 아니라 조직적 행동양식이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택되고 때로는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전술·전략적으로 활용되는 국가를 초월하는 확산현상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지원 테러리즘은 앞으로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가 핵 테러리즘 발생시 정확히 무엇을 얼마나 두려워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은 아직 핵 테러리즘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핵 테러리즘이 발생한다면 핵 테러리즘으로 인한 사상자와 대량파괴 외에도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심리적 후유증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지는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의 핵무기와 대등한 수준과 위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전 세계 핵무기의 95%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개발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sup>61)</sup>

그것은 북한이 보유한 예상되는 6~8개의 핵무기가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에 동일한 수준의 위력을 가지고 있으며,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테러리스트들에게 팔 경우 그 공포감의 정도는 달라진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행방이다.

북한의 내·외부 환경변화가 분단된 한반도에 북한의 테러리즘 위협에 항시 직면하고 있으며, 여전히 테러지원국으로 존재하고 있고 한국사회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세계화 추세와 관련하여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테러리즘의 발생 가능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북한을 비롯한 테러리스트들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상상을 초월할 피

---

61) 동아일보, 2005. 5. 10, 10면.

해를 줄 수 있어, 향후 테러리스트의 위협능력을 초월할 수 있는 반(Anti) 및 대(Counter)테러리즘 정책 연구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겠다.

끝으로 핵을 포함한 테러리즘에 대한 본질 이해 및 국민의 강력한 안보 의식이 절실하며, 테러에 대비한 기구 구성, 대테러 훈련과 무기화될 수 있는 핵물질을 보호 및 관리할 수 있는 예방책도 강화하는 등 현대 테러리즘에 대비한 국내노력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공조노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 절실하겠다.

본 논문을 정리하면서 국내 원자력 시설에 대한 방호능력과 평상시 대 테러에 대비한 훈련 등은 보안상 및 담당기관과의 충분한 협조가 제한되어 구체적인 분석과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해 향후 국내 원자로에 대한 안전평가를 테러에 대비한 연구 중심으로 후속조치가 된다면 매우 유익할 것으로 예상된다.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가. 국내문헌

- 국방부,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이해』 (서울 국방부, 2007)
- 김두현, 『현대 테러리즘론』 (서울, 벽산, 2004)
- , 김정현, 『현대 테러리즘의 이해』 (두남, 2009)
- 김열수, 『21세기 국가위기관리체계론』 (서울, 오름, 2005)
- 김동신 역, 『미국의 대전략』 (서울, 나남, 2005)
- 김태준, 『테러리즘』 (서울, 봉명, 2006)
- , 박재갑, 『한반도 주변정세와 한국의 대응방안』 (국회사무처, 2006 국회)
- 김태우, 박선섭 역, 『핵 테러리즘』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7)
- 문광건 등 4인, 『뉴 테러리즘의 오늘과 내일』 (서울, 한국국방 연구원, 2003)
- 박준석, 『뉴테러리즘 개론』 (서울, 백산, 2006)
- 양준희, 이종삼 역, 『국제분쟁의 이해』 (서울, 한울, 2009)
- 여영무, 『국제 테러리즘 연구』 (서울, 해양전략연구소, 2006)
- 유현석, 『국제 정세의 이해 : 9. 11 테러 이후 지구촌의 아젠다와 국제관계』  
(서울, 한울, 2003)
- , 『국제 정세의 이해 : 미국 패권시대의 지구촌의 아젠다와 국제관계』  
(서울, 한울, 2008)
- 윤영관, 신성호,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 (서울, 한울, 2008)
- 이정복, 『북핵 문제의 해법과 전망』 (중앙 M&B, 2003)
- 이태윤, 『새로운 전쟁 21세기 국제 테러리즘』 (서울, 모시는 사람들, 2004)
- , 『현대 테러리즘과 국제정치』 (서울, 한국학술정보, 2010)
- 이찬승, 『뉴테러리즘과 국가위기관리』 (서울, 대영문화사, 2007)



이창용, 『뉴테러리즘과 국가위기관리』 (서울, 대영문화사, 2007)

전현준 등 15인, 『10·9 한반도와 핵』 (서울, 이룸, 2006)

정세진, 『9. 11 테러와 미국의 일방주의』 (서울, 한울, 2002)

——,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한반도』 (서울, 한울, 2002)

조영갑, 『현대 전쟁과 테러』 (서울, 북 코리아, 2004)

최진태, 『테러리즘의 이론과 실제』 (서울, 대영문화사, 2006)

최진태, 『알카에다와 국제테러조직』 (서울, 대영문화사, 2006)

하영선, 남궁곤, 『변환의 세계정치』 (서울, 을유문화사, 2007)

## 가. 국외문헌

Amstrong, Karen, *Islam: A Short History*(New York: Modern Library, 2000).

Arquilla, John and David Ronfeldt, Eds., *Networks and Networks*(Santa Monica, RAND, 2001)

Bamford, James, *Body of Secrets: Anatomy of the Ultra-Secret National Security Agency, From the Cold War Through the Dawn of a New Century*(New York: Doubleday, 2001)

Bergen, Peter L., *Holy War, Inc: Inside the Secret World of Osama bin Laden*(New York: Simon & Schuster, 2001).

Buck, George, *Preparing for Terrorism: An Emergency Services Guide* (London: Delmar Publishers, 2002).

Crank, John P., and Patricia E. Gregor, *Counter-Terrorism After 9·11: Justice, Security and Ethics Reconsidered*(New York, Anderson, 2005)

Hago, Funke, *Der Amerikanische Weg*(Berlin: Verlag Hans Schiler, 2003).

Harmon, Christopher C., *Terrorism Today*(London: Frank Cass Publishers, 2000).

Herfried Munkler, "Altere und jungere Formen Des Terrorismus" Werner Weidenfeld(Hrsg.), *Herausforderung Terrorismus. Die Zukunft der Sicherheit* (Wiesbaden: VS Verlag Fur Sozialwissenschaften, 2004).

Howard, Russell D., and Reid L. Sawyer., *Defeating Terrorism: Shaping the*

New Security Environment(New York: McGraw-Hill, 2004).

Kai Hirschmann, Terrorismus(Hamburg: Europäische Verlagsanstalt, 2003).

Lowenthal, Mark M. Intelligence: From Secrets to policy(Washington DC: CQ Press, 2006).

Nye, Joseph S., Jr., 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Power(New York: Basic Books, 1990).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New York: Public Affairs, 2004).

Martin, Gus, Essentials of Terrorism: Concepts and Controversies(Sage Publications, 2008).

Pillar, R. Paul, Terrorism and U.S. Foreign Policy(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2001).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ecretary General Condemns Terrorist Attacks on the United States, in Strongest Possible Terms' (SG/SM/7949SC7142, 2001)

U.S. State Department, Patterns of Global Terrorism 2000, (Washington, D. C.: College, 1999)

Turner, Michael A., Why Secret Intelligence Fails(Virginia: Potomac Books, 2005).

Tucker, Jonathan B., ed., Toxic Terror: Assessing Terrorist Use of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Cambridge, MA: MIT Press, 2000)

## 2. 논문 및 보고서, 간행물

### 가. 국내자료

- 강경태, “9. 11 미국테러에 대한 미 국민의 반응과 부시대통령의 지지도”  
(국제정치연구 제4집, 2001)
- 강봉구, “아프간 전쟁이후 미국의 군 변혁”(국제정치논총 제42집, 한국국제  
정치학회, 2002)
- 강진석, “미국의 안보정책과 전략변화에 미친 대테러전쟁과의 영향”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구춘권,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비판적 조명”(21세기정치학회보 제15집, 2005)
- 국가정보원, “대테러정책연구논집”(대테러연구논총 제5호, 2008)
- 권정훈, “한국의 테러대응체제에 관한 연구”(용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공군사관학교, “북핵 위기와 미래지향적 한·미 공동 비전의 실천방안”(개교 60주년  
기념 학술토의, 2009)
- 과학기술부, “원자력 연구개발 및 정책 이행을 위한 핵 협력 외교방안”(2007)
-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 방사능방재발전계획”(2010)
- \_\_\_\_\_, “국내 21번째 원전, 신 고리 운전 1호기 운영허가 의결 ~”(2010)
- 구분학 등 7명,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민주평화 자문회의, 2009)
- 남재호, “일본의 핵 잠재력과 핵무장 가능성분석”(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영호, “9. 11 이후 다자적 대테러 협력의 형성과 향후 전망”  
(대테러연구총회 제5호, 2008)
- 김응수, “테러리즘의 초국가성 확산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_\_\_\_\_, “테러와의 전쟁: 군사적 대응과 특수부대 운용 고찰”(서경대 군사학연구,  
제4호, 2010)

- , “탈냉전 이후 테러리즘의 초국가성 확산과 대응전략”(군사지 41호, 2009)
- , “테러리스트의 인터넷 활용성 증대와 대응 과제”(한국위기관리논집, 2010)
- 김석용, “한국의 핵개발 문제에 관한 연구”(국방연구 제 2호, 2006)
- 김성환, “미국의 新안보 구상과 동아시아 전략”(국방정책연구 제86호, 2010)
- 김성범, “북한 핵과 한국의 안보정책”(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김태준, “북한의 테러와 테러리즘”(국방연구 제 45호, 2002)
- 남주홍, “북핵·미사일 위기 : 해법은 있는가?(국방정책연구 제84호, 2009)
- 대한범죄학회 KCA, “미래의 국제테러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향”(2007)
- 류재갑, “테러리즘과 국제관계 그리고 미래문명”(테러리즘과 문명공존, 한국국방연구원, 2002)
- 박원탁, “미국의 대테러정책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대테러연구논총 제3호, 2006)
- 박준석, “뉴테러리즘과 대응전략의 産, 學, 官, 초 상호 협력방안”(대테러연구논총 제5호, 2008)
- 박준석, “뉴테러리즘의 대응방안과 전략에 관한 연구”(한국안보행정학회보 제34호, 2009)
- 송대성, “미국의 반테러 전쟁 평가와 향후 전망”(정세와 정책 2002-2, 세종연구소, 2002)
- 신경엽,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경희대학교, 2002)
- 신성호,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및 한반도 동맹정책”(동아시아 연구원, 2009)
- 신의기, “각국의 테러 대응책과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대테러연구논총 제4호 2007)
- 노상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7)
- 서규화, “북한의 핵 개발과 동북아 안보”(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성채기, “국제적 대북제재의 현황과 군사·경제적 영향 분석 및 전망”  
(국방정책연구 제86호, 2010)
- 한석희,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동아시아연구원, 2009)
- 외교안보연구원, “PSI의 최근 진전상황과 주요쟁점”(주요국제문제 분석, 2004)
- 김현욱, “오바마 정부의 핵정책: 2010년 핵태세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주요  
국제문제 분석, 2010)
- 육군사관학교, “대량살상무기의 위협과 한반도 안보”(육군사관학교 제12회 국제  
심포지움 논문집, 2003)
- 오경섭, “북핵 국제공조의 한계와 정책 보완방안”(세종정책연구, 2010)
- 오태호, “국제 핵테러리즘 가능성에 관한 연구”(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 윤덕민,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일본의 방위정책에 미치는 영향”(국방부 연구과제, 2008)
- 이상현, “한국의 핵 확산정책”(세종정책연구, 2010)
- 이상호, “국방개혁 2020”(세종정책연구 제5권, 2009)
- . “한국의 대북 전쟁억제력 강화방안 연구”(세종정책연구, 2010)
- 이서향, “핵 비확산 실효성 제고를 위한 NPT체제의 발전방향”(외교안보연구원, 2010)
- 이제영, “세계 핵 비확산체제”(평화네트워크, 2009)
- 이창용, “한국의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 테러리즘 방지를 중심으로”(영남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이태윤, “탈냉전기 국제 테러리즘에 관한 연구”(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이황우, “주요 선진국의 대테러정책 조명”(대테러연구논총 제3호, 2006)
- 이해명, “탈 냉전기 핵 및 화생방 테러리즘에 관한 연구”(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이춘근 등 6명, “상생과 공영의 남북 과학 기술협력 추진방향”(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 , “북한의 핵 및 로켓기술 개발과 향후 전망”(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 임한욱, “21세기 첫 전쟁, 테러와의 전쟁”(대테러 연구 제24집, 2002)

- 양규성,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따른 한국군의 대응 전략”(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장기봉, “유테러리즘의 등장과 이에 대응한 국가 네트워크 전략”(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조기형, “아·태지역에서의 비군사적 위협과 한국군 변환에 관한 연구”(서울 벤처 정보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조성권, “9. 11이후 국제 테러리즘의 경향 및 전망”(대테러연구논총, 제4호 국가정보원, 2007)
- 조양호, “일본 핵무장론의 동향 및 전망”(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제분석, 2009)
- 조엘 위크, “북한 핵 문제의 해법”(북한해양수산저널 제2호, 2010)
- 최가남, “중동 테러리즘에 대한 한국경호 인준도 극대화 방안”(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최명해,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북·중 관계”(국방정책연구 제85호, 2009)
- 최재훈, “중동 테러리즘과 급진 이슬람원리주의의 역학관계 연구”(한국외국어대학교, 2006)
- 최진태, “테러시대 한국의 대테러 발전방안”(자유기업원, 2007)
- 홍순남, “국제정치와 중동 테러리즘”(대테러 연구 24집, 2002)
- 홍혁익, “오바마 행정부의 핵 안보질서 강화 행보와 북핵문제”(코리아 연구원 현안진단 제162호, 2010)
- ,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세종정책연구 제6권, 2010)
- 지식경제부, “2008 원자력 발전백서”(2008)
- 권태희, “주변 4강의 안보전략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한남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노상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가. 국외자료

- Ajami, Fouad. "9·11 After : The Sentry's Solitude," Foreign Affairs, Vol. 80, No. 6, November / December 2001.
- Ajoob, Mohammed. "South-west Asia After the Taliban," Survival, The IISS Quarterly Vol. 44, No. 1, Spring 2002.
- Bleikker, Roland, "Globalization, Identity and Prospects for Peace," Paper presented for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orld Order and Peace in the New Millennium, help by KAIS, Seoul, May 26~27, 2000.
- Cameron, Gavin "Nuclear Terrorism : Weapons for Sale or Theft?" Foreign Policy Agenda Vol. 0, Washington, D.C, 2005. 3
- Carter, Ashton B. Carter. "The Architecture of Government in the face of Terrorism," International Security, Vol. 20, No. 3, winter 2001/2, "the Architecture of Government in the face of Terrorism," international Security, Vol. 20, No. 3, winter 2001/2
- Gorden, Philip H. "NATO After 11 September," pp. 89-106. Michal Mccgwine, "Shifting the Paradigm," international Affairs, Vol. 78, No. 1, January 2002.
- Holmers, Kim R.. " The Terrorist attack on America: Implication for U. S. Policy," The Heritage Foundation Executive Memorandum, No. 1, January 2002.
- Ikenberry, G. John. "International Terrorism : A New Mode of Conflict," in D. Carlton and C. Schaerf, ed, international Terrorism and World Security, London : Groom, 1975
- Moodie, Michale. "Confronting the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Challenge ; The Need for and Intellectual Infrastructure." The Fletchet Forum World Affairs, Vol. 28, No. 1, Winter 2004.
- Ochmaneck, David. "Future Warfare and its Ramifications for U. S. and Jorean Military Planners," Paper presented for the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Air Power, organized by the Center for



- International Studies, Yonsei University and RAND, sponsored by ROK Airforces, Seoul August 31-September 1. 2000. p.1.
- Perl, Raphael F. "Terrorism, the Future, and U. S. Foreign Policy," CRS Issue Brief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The Library of Congress, 2001.
- Prelas, Mark A. "Weaponization and Delivery Systems"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Counterterrorism, edited by Tusher K. Ghosh, et. al. New York : Marcel Dekker, 2002.
- Robert, Adam. "Counter-terrorism, Armed Force and the Laws of War," Survival, the IISS Quarterly Vol. 44, No. 1, Spring 2002.
- Sutton, Patrice M. and Robert M. Gould. "Nuclear, Radiological and related weapon," in Terrorism and Public Health, edited by Levy and Sidel,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ABSTRACT

## A Study on the Possibilities Counter Strategies of the North Korea's Nuclear Terrorism Threat

Kim, Jong Su

Major in International Security

Dept. of Int'l Security and Strateg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Hansung University

In international society, North Korea is pointed as the country that holds nuclear arms. North Korea is the only communist country which has taken hereditary system in the world. also has maintained a cease-fire during 60 years. These situations threaten a national security as well as Korean Peninsula.

It is assumed that North Korea which carried out a nuclear test has 8 to 10 nuclear weapons. It makes that we cannot deny the possibility of nuclear attacks.

The possibility that terrorists in the world like North Korea destroy nuclear installations to use nuclear substance is quite high, in considering the social situation of North Korea and relation between Korea Peninsula and the world.

However, it is not that serious to consider a counter measure, because North Korea has not shown the examples of national threaten.

After terror 9.11, International society have done the best to save the world from terrorism and it builds up a international mutual-assistance system through 2010 nuclear safeguard summit conference. At this point, we should consider a counter measure against modern terrorism and try to form international relation firmly.

## 감 사 의 글

지난 2년 동안 남보다 늦게 시작한 학업에 열중하도록 배려해 주신 연대장님 김천 대령과 학업으로 부대업무에 제한이 있음에도 부대관리를 대신해준 작전장교 정우진 대위를 비롯한 대대 전 간부에게 고마움과 진심으로 미안함을 이 논문으로 대신하여 전합니다.

무엇보다 대학원에 진학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아낌없이 지원해준 아내 임혜영와 아들 김도용, 딸 김지은 등 가족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소하면서도 누구도 쉽게 접하지 못한 국제안보전략학과 대학원 과정을 거치면서 국제분쟁과 분단된 한국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연구하고 많은 것을 터득할 수 있었으며, 어려운 환경과 교육과정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테러리즘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고 석사논문의 방향과 작성요령 등 전반적인 학문의 깊이를 탐독할 수 있도록 넓은 가르침과 마지막까지 논문을 완성되도록 세심하게 지도해 주신 존경하는 김응수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을 준비하고 공개발표시 세심한 지도로 논문 방향을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조영갑, 이태운, 강용배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지도와 배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구형희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학원 동료이자 후배인 염상원 학우에게 논문을 작성하는데 많은 조언과 지원에 아낌없이 도와 준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1년의 군 생활도 마무리하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과 자랑으로 이 논문을 남길 수 있어 마음 뿌듯하며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분들께 부끄러운 마음 무릅쓰고 이 논문을 바칩니다.

거듭 감사드리며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충성!

2010년 12월

김 종 수.